

第268回國會
(臨時會·閉會中)

民族和解와 繁榮을 위한 南北平和統一特別委員會會議錄

第 4 號

國會事務處

日 時 2007年8月16日(木)

場 所 統一外交通商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제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관련 보고

審査된案件

1. 제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관련 보고 1

(10시09분 개의)

○위원장 배기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임시회·폐회중 제4차 민족화해와번영을위한남북평화통일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특위 회의에 출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우리 위원회의 위원 변경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5일자로 열린우리당 소속 한병도 위원과 유승희 위원께서 사임하시고, 7월 30일 한나라당 소속 정문헌 위원께서 보임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함께 국정을 논하게 된 것을 환영하며 새로 보임되신 정문헌 위원님이 아직 자리에 계시지 않으므로 인사는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9일 남북의 당국자는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평양에서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하였고 14일부터는 정상회담을 위한 준비접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회담은 지난 2000년 제1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7년 만에 개최되는 것으로 공동합의문에서 남북관계를 보다 높은 단계로 확대 발전시키고 한반도 평화와 민족 공동의 번영,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 나가는 데 중대한 의의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북핵 문

제 해결을 위한 2·13 합의가 이행되고 있는 시기라는 점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현재 남북한 사이에는 북핵 문제 외에도 남북경협 문제나 이산가족 상봉 문제, 남북자 문제 등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실타래처럼 얽혀 있는 남북관계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과 공동 번영의 전기를 마련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금년에도 북쪽에서 많은 피해를 수해 때문에 크게 입은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특위 차원에서 특별지원대책을 마련해서 특별히 지원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도 저희가 같은 동포로서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라도 긴급구호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혜를 모아 주시고 또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라고 더 특별히 우리 통일부장관님을 비롯한 통일부에서 정부 차원에서의 긴급구호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서 북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1. 제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관련 보고

(10시13분)

○**위원장 배기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관련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먼저 이재정 통일부장관으로부터 남북정상회담 개최 관련 보고를 듣고 난 이후에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재정 통일부장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이재정** 존경하는 배기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관련된 보고를 드리게 된 데 대해서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8일 정부는 남북정상회담 개최 사실과 그간의 과정을 소상하게 국민 여러분께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이후 정부는 정상회담추진위원회와 준비기획단을 중심으로 관련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개성에서 열린 준비접촉에서는 경의선 육로 방북에 합의하는 등 정상회담과 관련한 절차적·실무적 문제를 북측과 협의하고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이 한반도 평화정착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역량을 모아 나가는 동시에 여러 정당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북핵 문제 해결을 촉진하고 남북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물론, 초당적인 협력과 국민적 참여를 통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남북정상회담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정상회담 추진 과정에서 제기되는 주요 사안들에 대해서는 여러 계기를 통해서 위원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신임 차관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관세 차관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준비된 자료를 중심으로 이번 제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

랍니다.

먼저 이번 남북정상회담 목표를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설정하였습니다.

첫째,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공고화, 둘째 남북공동번영의 촉진, 셋째 6자회담 진전과 향후 동북아 다자발전에 기여, 이러한 목표 아래 기본방향으로 다음과 같은 기본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첫째로 남북 간 기존 합의를 존중하고 실천에 옮기도록 하는 회담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남북관계를 예측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합니다.

특히 4대 합의서(7·4 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 6·15 공동선언) 등의 성실한 이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둘째로 미래를 위한 회담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큰 틀에서 남북 간에 상호 이해와 타협의 자세를 견지해 나가면서 미래를 함께 열어가는 그런 회담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회담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북경제협력을 생산적 투자협력, 쌍방향 협력으로 발전시켜서 우리에게서 투자의 기회로 삼으며 북에게는 경제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넷째로 역사의 순리에 따르는 회담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성과보다는 역사가 부과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합니다.

역사에서 허용되어 있는 한계를 인식하면서 합의해야 할 것은 반드시 합의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동시에 6자회담과 조화를 이루고 이의 성공을 촉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기본방향을 가지고 이제 다음과 같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이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8월 8일 남북정상회담 개최합의 공식 발표 직후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추진기구를 구성해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먼저 대통령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남북정상회담추진위원회를 조직하였습니다. 통일부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준비기획단을 정부 각 부처의 참여 아래 구성하고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4차 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통일부차관을 처장으로 하는 사무처를 통해서 추진위원회와 준비기획단이 성안한 내용들을 실행해 나가고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간 남북정상회담추진위원회 회의 및 준비기획단 회의를 개최하면서 유관부처 간의 긴밀한 협의 아래 회담 준비에 만전을 기하면서, 특히 이번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국민적 여망을 실천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와 별도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상회담 개최 합의서의 법적인 발효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8월 8일 제2차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심의 의결을 거쳐 8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하였으며, 이제 오늘 대통령의 공포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합의서의 법적 효력 절차를 밟고 이러한 법적 효력 절차와 함께 투명하게 이번 회의를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8월 14일 개성에서 남북정상회담 준비접촉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준비접촉회담에는 통일부차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남측 대표단과 그리고 북측의 통전부 부부장인 최승철 부부장을 단장으로 한 북측 대표 간에 협의를 하여 체류 일정, 대표단의 규모, 경호, 의전 등 절차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하였습니다.

주요 합의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대표단 규모는 과거 1차 때보다 20명이 늘어난 수행원 150명과 취재기자 50명 등 총 200명으로 확정하였습니다.

회담 의제는 8월 5일 남북합의서에 기초하여 한반도의 평화, 민족 공동의 번영 그리고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 이 세 가지의 의제를 중심으로 남북 정상 간에 모든 과제들을 격의 없이 의견교환을 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체류 일정은 참관 등 구체적인 체류 일정이 마련되는 대로 북측이 전달해 오기로 하였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 우리 측의 의견도 제시를 할 것입니다.

왕래 절차에 있어서는 평양 방문과 서울 귀환시 개성을 경유하는 서해선 도로를 이용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은 전용차량으로 방북하며 행사 기간 내내 전용차량을 사용하도록 하고 경호차량도 수행, 동행하면서 그 임무를 맡기로 하였습니다.

선발대는 모두 35명으로 구성하며 선발대의 대

표는 통일부차관이 맡도록 하고 대표단 방북은 회담 7일 전에, 즉 8월 21일에 파견하기로 하였습니다.

편의 보장 및 신변 보장 등은 북측이 남측 인원들의 숙식 교통 통신 의료 취재활동 등 기타 필요한 모든 편의를 제공하기로 하며 신변을 보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준비접촉을 통해서 대부분의 절차 문제에 대하여 의견일치를 본만큼 후속조치 추진에도 큰 어려움이 앞으로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분야별 실무접촉 및 선발대 파견활동을 통하여 나머지 구체적인 세부사항에 대한 협의 및 사전 점검도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이 일회성의 성과보다는 남북관계에 실질적인 진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특히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 간의 평화 문제, 경제협력 등에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진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차분하게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상회담 추진 과정에서 국회와 국민들의 의견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투명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고 여기에는 각계의 대표들과 또 전문가들의 의견을 지금 수렴해 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또한 정당의 의견도 듣기 위해서 오늘은 대통령 참모총장에 보고를 하였고 내일은 한나라당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 아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연관을 맺어 나가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기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위원님 한 분의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해서 10분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필요하신 위원님께는 나중에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한나라당의 심재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엽 위원 한나라당 강원도 강릉 출신 심재엽 위원입니다.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 국민적인 지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2항에 보면 “남북관계의 발전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투명과 신뢰의 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하며, 남북관계는 정치적·과당적 목적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장관 보고에 의하면 그런 절차를 거치겠다고 보고를 하셨지만 성사되기까지는 투명하거나 원칙에 충실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지금 대북창구가 통일부 아니겠습니까, 원래?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정원이 이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켰다는 것은 많은 국민들이 밝힐 수 없는 뒷거래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도 지금 갖고 있습니다.

1차 정상회담 때, 참여정부 들어와서 대북송금 특검 때 4억 5000만 불이 불법 송금된 것이 밝혀져 가지고 박지원 씨나 임동원 씨가 사법처리를 받았지요. 기억하시지요?

장관께서는 뒷거래가 이번에는 없었다고 확인하십니까? 어떻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지금 심 위원께서 말씀하신 국정원이 왜 이 일을 담당했느냐, 왜 통일부가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심재엽 위원** 뒷거래만 확인해 주세요. 다른 것은 제가……

○**통일부장관 이재정** 아니, 이 말씀도 제가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서요.

○**심재엽 위원** 국정원이 이 일을 추진하면서 뒷거래가 있었느냐 없느냐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통일부장관 이재정** 아니, 이것은…… 왜 통일부가 안 했느냐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심재엽 위원** 그 부분은 제가 그냥 의혹을 제기하는…… 제가 여쭙 보는 것은 이 회담 성사에 뒷거래가 있었느냐 그것만 답변해 달라고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제 말씀 좀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엽 위원** 없습니까, 있습니까?

아니,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싸움할 시간이 없습니다.

○**통일부장관 이재정** 뒷거래를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참, 대단히 잘못된 문제 제기라고 생각합니다.

○**심재엽 위원** 1차 회담 때 그런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여쭙 보는 것입니다.

○**통일부장관 이재정** 전혀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없고 있지도 않습니다.

○**심재엽 위원** 예, 그렇다면 제가 의심이 되는 것이 1차 정상회담 때 4억 5000만 불을 뒷거래했습니다. 지금 김정일 위원장이 그렇다면 아무런 뒷거래 없이 이러한 정상회담에 말하자면 옹한 것은 혹시 한나라당이 다음 정권을 창출하게 되면 대북지원에 어떤 문제가 있을까봐 어떤 정치적인 목적으로 아무런, 그런 뒷거래 없이 옹한 것이 아닌가 이런 추측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저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측에서도, 이번에 합의된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심재엽 위원** 아니, 주무부처 장관께서 ‘생각한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있다’ ‘없다’ 분명하게 잘라 말씀해 주십시오.

○**통일부장관 이재정** 전혀 없습니다.

○**심재엽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다음 정권에서 분명히 이 부분은 또 특검을 할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오늘 장관께서 말씀하신 것이 잘못하면 위증의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자신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자신 있습니다. 그렇게 넘겨서 말씀하시기보다는 이번 이 사항을 좀더 분명하게……

○**심재엽 위원** 아니, 넘겨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1차 회담 때 4억 5000만 불이라는 불법 송금이 있었고 지금 2차 정상회담에서 한 푼도 없다고 하니까 1차 회담 때 우리가 겪은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쭙 보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어저께 대통령께서 8·15 경축사에서 이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대체적인 골격에 대해서 자상하게 말씀하셨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저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은 안 된다”든가 ‘이것만은 꼭 받아내라’는 부담을 지우기보다는 큰 틀에서 미래를 위해 창조적인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런 말씀이 계신데요. 저는 이 말씀에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재산과 생명, 안위를 책임지고 또 남북정상회담이라는 이 중대한 정상회담을 앞두고 그래도 국민들이 원하는 그러한 의제, 이것은 꼭 얘기를 해 주기를 바라고 이

것은 꼭 성취해 주기를 바라는 것은 아무리 대통령께서 자유롭게 회담을 하시고 싶어도 의제에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어저께 경축사 중에서 이번 정상회담에서의 북핵 완전 폐기에 관련된 확실한 의지가 안보입니다. 단지 6자회담의 성공적인 진전을 위해서 양자 정상회담이 도움이 되고, 이런 추상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의제로 삼아 가지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으로부터 확실하게 북한 핵 폐기를 하겠다는 약속을 받을 계획은 없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그 의제에 대한 말씀은 이미 합의서에 나와 있으니 그 범위 내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 나가고, 양 정당 간에 이 문제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합니다.

○**심재엽 위원** 이 합의서는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이 다 포괄적으로 녹아 있는 그런 전체적인 합의서입니다. 그러니까 포괄적인 합의서 내용 중에서 구체적인 의제가 상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인데 통일부장관께서 그것 분명히 의제로 상정되어 가지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구체적인 의제는 현재 준비기획단과 추진위원회에서 논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아마 발표할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재엽 위원** 그러면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이것을 담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반드시 이번 의제에서 거론해 주지 않기를 원하는 NLL 북방한계선…… 우리 장관께서는 우리나라 국민인지 아닌지 의심 갈 정도의 발언을 지난번에 하셨지요? 영토 개념이 아니고……

○**통일부장관 이재정** 그렇게 발언하시면 장관에 대한, 그것은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재엽 위원** 우리가 지금 영토 개념이 아니면……

○**통일부장관 이재정** 아니, 제 문제 제기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이해를 하시고 말씀하셔야지요.

○**심재엽 위원** 글썄, 그러니까 영토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 국군 장병들이 그렇게 목숨 잃고 사수해야 될 그런 NLL이 아니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NLL의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기능과 역할의 관점에서 제가 그날 말씀드린 것이고요. NLL이 갖고 있는 안보적 기능과 역할, 서해상에서의 안보 문제를 어떻게 확보해 나가느냐 하는 그 구체적인 기능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NLL 문제는 언제나……

○**심재엽 위원** 안보 문제라는 것은 우리가 국방을 철저히 하면 안보가 담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안보를 담보하기 위해서 서해대전에서 우리 귀중한 장병들이 6명이나 전사하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영토 개념이 아니라면 그렇게 목숨을 바칠, 지킬 이유가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장관께서는 다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이것 영토 개념이 분명히 아닙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NLL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기능과 역할로서 이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지켜 나가야 될 목적이 있다고 하면 그 선이 가지고 있는 목적은 분명히 우리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목적이라고는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선 자체가 갖고 있는 선의 성격이나 역사적 배경,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 내려고 하는 목적 자체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심재엽 위원**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이번……

○**통일부장관 이재정** 지난번 서해교전만 하더라도 결국 안보를 어떻게 지켜 내느냐 하는 그 방법론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 더 반성해 봐야 될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심재엽 위원** 북핵 폐기에 대한 약속을 얻는 의제라든가 NLL 재확정에 대해서 상정 안 하는 문제는 북핵이 완전 해결된 다음에 군사적인 신뢰가 쌓이고 국민적인 어떤 동의가 있을 때 비로소 남북 간에 논의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사실상 남북기본합의서가 만들어진 1992년도에 보면 그 당시 이미 민자당 정권 시절 남북기본합의서에 NLL 문제를 실제로는 남북 간에 다시 협의해서 재확정될 때까지 현상을 유지한다, 이런 원칙을 정해 놓은 바가 있거든요.

○**심재엽 위원** 지금 10분 가지고는 중요한 사안을 질의하기가 상당히 짧으네요, 시간이.

어제 대통령께서 경축사에서 하신 말씀 중에서 저는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제 협

력 부분인데 상당히 상호주의적인 그런 견해를 말씀하셨고…… 우리 입장에서는 투자, 북한 입장에서는 경제협약이라 그럴까요, 그런 점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것은 앞으로 재원 확보 문제 일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감히 한 말씀 제안을 한다면 북핵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쌍방 어떤 상호주의적인 경제 협력이라 그러면 재원 확보를 위해 가지고 북한개발은행이라 그럴까요, 예를 들면 ADB라든가 세계적인 어떤, 또 국내 금융기관이 다 참여하는 그러한 북한개발은행 같은 것을 창설해서 우리가 말하자면 재정적으로 상당히, 지금 국채도 발행하고 어려운 상태이고 우리나라도 지금 SOC가 부족해서 많이 애를 먹고 또 양극화 때문에 복지 개선도 이제 많이 필요한데 이런 재원 확보를 위해서 북한개발은행이라는 것을 한번 빨리 검토해서 서둘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관께서는 제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그것은 앞으로 검토해 나가야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위원님이 제의하신 그것도 역시 검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재엽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기선 심재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신당의 이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경 위원 이상경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이 남북 평화체제, 또 남북한 경제협, 북핵 문제 해결에, 물론 그것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지만,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라는 점 때문에 굉장히 국민의 기대가 큼니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7년 동안 원래 약속했던 답방이라든가 2차 정상회담 진전이 없었던 것은 그동안에 북한 핵 문제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 최근에 개성공단으로 상징되는 정부의 계속적인 남북한 경제협력, 그리고 상호 간의 신뢰회복을 위한 노력, 또 6자회담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이런 것이 밑거름이 되어서 이번에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경 위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제에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북핵 문제가 정상회담의 의제가 되어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뜨겁습니다.

노 대통령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듯이 이번 정상회담의 목적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공고와 그리고 6자회담의 성공을 촉진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지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예.

○이상경 위원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번 정상회담에서 직접적이건 간접적이건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진일보하게 될 성과를 기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논의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북핵 문제는 6자회담이라는 접근으로 접근하고 있고, 이것이 남북 간의 문제만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핵 폐기 약속을 받아야 하겠다 하는 것은 옳지 않은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장관 의견을 밝혀 주십시오.

○통일부장관 이재정 이제 북핵 문제에 관한 것은 한반도 평화에 아주 직결되는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이미 6자회담의 틀에서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정상회담에서 6자회담의 성공, 6자회담의 진전, 그리고 2·13 합의의 이행조치, 이런 데 대한 논의를 하시는 것으로서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목표가 있다면 역시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한반도 평화를 이루기 위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경 위원 김대중 전 대통령도 핵 문제가 정상회담에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고, 또 6자회담의 성공을 촉진하는 정상회담이 되어야 하고 핵 문제는 중요한 논의 사항이 되어야 되겠지만 북핵 의제가 다른 논의의 전제가 되는 것은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북핵과 남북경협을 구분하여 추진해 왔던 그동안의 대북정책 기조와 어긋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그 점은 회담 진행에 있어서의 하나의, 뭐라고 그럴까, 과정의 문제인데요. 아마 이것은 정상 간의 논의 과정 속에서 충분히 적절한 방법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를 생각합니다.

○이상경 위원 또 하나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NLL 문제입니다.

먼저 NLL이 안보적 개념이란 언급을 해서 지금 논란이 되었습니다. 아까 심재엽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NLL이 영토주권과 관련이 있다는 김만복 국정원장의 견해와 장관의 견해는 다른 것입니까? 간단하게 거기에만 답변을 하시고 제가 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통일부장관 이재정** 구체적으로는 차이점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경 위원** NLL은 1953년 8월 30일 유엔군 사령관이 설정할 당시의 상황을 보면 좀 이중적인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안보적 개념이고 또 한편으로는 실질적으로 해상경계선으로 기능을 해 왔다는 점에서 보면 영토주권과 관련이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 이중적인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실제로 NLL이 그어질 당시에는 우리 어민들이나 우리 쪽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북쪽으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해 놓은 하나의 경계선이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어떤 경계의 의미도 있고 그러나 그 목적 자체는 내용과 기능 자체로서 본다고 하면 안보적 개념이 훨씬 더 크다,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목적에서 적어도 이 선이 기능을 해 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상경 위원** NLL이 이번 남북정상회담에 의제가 됩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의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얘기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정상 간에 한반도 평화라는 관점에서 이 과제가 필요하다면 논의가 되겠지만 지금 제가 성급하게 이것이 정상회담의 과제냐,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경 위원** NLL을 그대로 유지하는 기존의 합의는 유지하되 이 지역에서의 무력 충돌을 방지하고 또 남과 북 어느 쪽도 자유롭게 어로작업을 못 하고 오히려 중국 어선들이 불법적으로 어로작업을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 간의 어로구역에서 남북한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저는 지금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요.

다만 이 문제를 다뤄 나가는 데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민들의 어떤 권익과 이익, 이런 문제들도 고려해야 될 것이고요. 평화를 어떻게 유지해 나가느냐, 서해상에서의 군사적 안보를 어떻게 유지해 나가느냐 하는 이런 문제들을 충분히 논의하는 관점에서 더 깊이 있는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경 위원** 경험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2 경제특구사업 추진, 또 DMZ 공동 개발, 이런 것들이 남북경제공동체 구상에 구체적인 실행 사업으로 제안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여러 NGO들이나 혹은 국제사회에서도 DMZ의 평화적 이용이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안을 제시한 바도 있고요. 이런 것은 역시 남북 간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과제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경 위원** 이번 정상회담에서 남북경제공동체 구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정부에서는?

○**통일부장관 이재정** 이번에 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의제라고 하는 것이 민족 공동의 번영이고 참여정부가 그동안 공존공영에 대한 과제를 즉 제시해 왔기 때문에 남북경제공동체는 이번 논의 과정에서 남북 정상 간에 상당히 중심적 과제로 논의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경 위원** 잘 아실 것입니다만 경제적 지원과 협력에 대해서 일부 어떤 비판이 있습니다, 일각에서. 그 비판은 “북한이 남한을 경제적으로 이용만 하고 있다. 이용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오히려 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실제로 이번에 지하자원 공동 개발과 경공업 원자재 유상 제공이라고 하는 이 사업을 통해서 보시다시피 이제 남북 간에 새로운 차원의 경제협력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런 우려는 지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경 위원** 비용과 관련해서요.

재경부가 2005년 산업은행에 용역을 의뢰해서 만든 보고서가 있습니다. ‘중장기 남북경협 추진을 위한 방안’, 이 보고서를 보면 2006년부터 2015년, 그 기간 동안에 남북경협에 투입되는 총비용을 약 65조 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증세나 목적세를 신설하고 또 국채 발행,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금 조달을 할 것이다 이런 방안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 이 보고서 같이 증세나 또는 국채 발행 등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정부가 그것에 대한 검토를 한 바는 없고요. 지금 여러 연구기관에서 남북관계의 발전적인 하나의 미래를 설정하면서 그런 연구보고서를 내고 있습니다만 정부가 공식적으로 채택한 바는 없습니다.

○**이상경 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향후 어느 정도의 남북경협 재원이 필요하고 또 어떤 방식으로 조달할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 검토는 하셨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이 있으면 밝혀 주십시오.

○**통일부장관 이재정** 아직 공개해서 밝힐 단계는 아니고요. 정부로서도 이런 문제들을 남북관계 발전의 진전 상황에 따라서 경제협력을 어떻게 해 나가느냐는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밝힐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남북경제공동체라고 하는 좀 더 발전적인 관계가 이루어진다면 아마 그것에 따라서 구체적인 논의가 있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경 위원** 이와 관련해서 하나만 더 물겠습니다.

이 남북기금은 아무튼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 IBRD에 신탁기금 설치라든가 또는 동북아개발은행 설립, 이런 방법이 좀 검토된 적은 있습니까? 아니면 향후에 검토할 의향은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아마 이 문제는 향후에 분명히 검토를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국내 자원만 가지고 할 수는 없을 거고요, 국제 금융의 참여를 우리가 아주 신중하게 효율적으로 연구 검토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경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기선** 이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당의 정청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청래 위원** 정청래입니다.

남북정상회담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그리고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킨 노무현 대통령과 그리고 이재정 통일부장관, 김만복 국정원장님께 축하드

립니다.

어제 대통령께서는 8·15 경축사를 통해서 “욕심 부리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그런 가시적인, 작지만 소중한 그런 성과들이 도출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남과 북은 1953년 분단 이래 지금까지, 냉전의 시대에는 사실상 적대적 상호 의존 관계였습니다. 적대적이었지만 상호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국민의 정부 6·15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호혜적 상호 공존 관계의 틀이 마련되었다. 그리고 그것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정상회담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작년 10월 9일 북핵 위기 때 우리 국민들이 ‘이것이 남침 위협이다’라고 느꼈던 국민은 5%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대북 포용정책, 햇볕 정책이 갖고 온 크나큰 성과의 상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953년부터 2000년까지 실제로 북한 땅을 밟은 사람은 비밀 행정요원 등 1년에 50명 정도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상회담 이후, 48년간 2800명이었는데 정상회담 이후 8년간 150만 명 이상이 북녘 땅을 밟았습니다. 대북 포용정책의 결과물입니다. 48년간 1년에 50명씩 북한 땅을 밟았다면 지금 현재는 1년에 10만 명씩, 금강산을 제외한 인원입니다. 관광을 제외한 인원 10만 명이 북녘 땅을 밟고 있다고 합니다. 통일에 대한 지름길 그것은 바로 남북의 자유 왕래, 교류에 기인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정파의 이해득실에 따라서 냉전적 사고로 찬 물을 끼얹는 듯한 그런 발언은 자제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 정상회담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것을 경계합니다. 김영삼 전대통령도 1992년 취임사를 통해서 “정권은 순간이지만 민족은 영원하다”라는 아주 명언을 남긴 바 있습니다. 한나라당도 김영삼 대통령의 취임사를 한번 면밀히 예의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정상회담 방문단에 한나라당 대표를, 같이 동참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가 수행원에 대한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구체적인 안이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원칙적으로

저희는 정치권의 참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청래 위원 초당적 협력 차원에서 정파의 이익이 아니라 민족의 이익에 우선한다는 그런 관점에서 한나라당을 설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미묘한 부분이지만 실제로 지금 거론되고 있는 대선 예비주자들을 수행단에 포함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문제가 좀 관심 사항이기도 합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이 문제는 남북정상회담이 적어도 얼마 남지 않는 대선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대선 예비주자들이 수행원 쪽에 참여하는 것은 그렇게 썩 적절치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아직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는 없습니다.

○정청래 위원 가급적이면 논란의 소지를 없앤다는 차원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 기조를 유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번 정상회담 의제를 제가 이 자리에서 다 공개해라, 이렇게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2005년 6월 17일 정동영·김정일 면담을 통해서 9·19 공동성명이 나왔고, 그리고 3항에 보면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해서 노력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구적 평화체제라 하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그런 문제일 것입니다.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논의될 수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지금 큰 틀에서 세 가지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한반도 평화가 가장 중요한 주제이고요. 이 주제를 놓고 양 정상 간에 격의 없는 대화가 이루어지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런 형태로 꼭 이런 이런 제목으로 대화가 있겠느냐, 혹은 과제 논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정청래 위원 예, 알겠습니다.

○통일부장관 이재정 어떤 형태로든 논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청래 위원 알겠습니다. 이 평화체제 보장 문제는 정치 군사적인 매우 민감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하시더라도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예.

○정청래 위원 그리고 대략적인 윤곽, 설계도는 좀 그렸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아마 우리 국민

모두의 희망일 것입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께서 경제공동체를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경제공동체의 상징이 개성공단이고 그리고 대륙철도의 실질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개성공단에도 저는 몇 번 가 보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차질 없이 진행되는 데 이번 정상회담에서 노력해야 될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예.

○정청래 위원 또 하나는요, 실제로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기도 합니다. “대륙철도를 연결해라”라는 것이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었습니다. 그리고 시험 운행을 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논의하실 예정입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이 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현실적인 수요가 있기 때문에 철도에 대한 문제는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아직 대륙철도의 연결이라고 하는 큰 과제까지 이르게 될지는 확실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정청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그럴 수밖에 없을 상황이기 때문에 대답을 피하셨는데 이 부분은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실향민들, 그리고 이산가족들, 이 분들이 연령이 계속 이렇게 드시다 보니까 이 부분은 저는 최대화, 극대화해야 된다,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성과를 내 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예,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이 인도적 사업은 정말 우리가 더 강력하게 확대하고, 또 제도화하고 정착시켜 나가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정청래 위원 금강산에 면회소가 완공되기 전이라도 저는 이 부분은 반드시 이번 정상회담 성과의 보따리 안에 반드시 포함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당부드립니다.

4대 합의서,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사실상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6·15 정상회담 때도 사실상 합의된 것 중에 안 지켜지고 있는 부분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담방 문제였습니다. 저는 2차 남북정상회담이 됨으로써 정례화의 틀을 마련했다는 부분에서 또한 상

당한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3차 정상회담은 답방 형태로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답하시기 곤란하시겠지만 그 부분도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이 합의된 내용에 대한 준수라고 하는 것은 남북 신뢰관계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 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합의된 내용에 대한 폭넓은 검토와 실천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청래 위원** 한반도 문제가 우리 민족끼리 해결해야 될 과제이지만 국제공조 또한 필요합니다. 따라서 저는 북한의 체제 안전보장은 부시·김정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북한의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배상 문제가 걸린 일본과의, 아베와의 정상회담, 이런 부분이 추진되어야 한반도 문제를 종결지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이 문제는 처음 보고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반도 문제라는 것은 역시 주변 국가 또는 관련국들 간의 긴밀한 공조와 연관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번 정상회담도 이런 관점에서 역시 유의하면서 저희들이 진행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정청래 위원**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칭찬받을 일을 하면 칭찬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항상 의심의 눈으로 보면 의심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한나라당에 촉구합니다. 지금 정상회담을 하려고 하는 이 마당에 냉전적 사고로 찬물을 끼얹는 발언, 그것은 민족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저는 어울리지 않는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텔레비전 개그 프로에 보면 “뭘 말인지 알지?” 이런 것이 요즘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뭘 말인지 모르지” 이런 걸로, 모르쇠로 일관하고 의심의 눈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항간에 퍼주기 의혹이 있습니다. 개성공단이 10개가 되면 퍼오기를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파의 이익이 민족의 이익에 우선할 수 없다. 그리고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 취임사에서 정말 멋진 말씀을 하셨는데 “정권은 순간이지만 민족은 영원하다” 이런 관점에서 이번 정

상회담이 내실 있는 그런 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배기선** 정청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제가 순서를 드리도록 하겠는데 방청석에 임종인 의원께서 일부러 아마, 위원은 아니시지만 오늘 남북 2차 정상회담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을 희망해 오셔서 지금 저희가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시간은 로이터 방송과 APTN에서 특별히 지금 관심을 가지고 취재를 하고 계시고, 우리 국내 언론도 취지를 하고 계시는데 이게 다 이번 우리 한반도 평화 번영에 관한 아주 중대한 국가적 대사에 대한 관심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적극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남북정상회담이 열흘 남짓 남았습니다. 준비기획단장을 장관께서 맡으셔서 가지고 여러 가지 분주하시겠습니다. 다만 준비를 꼼꼼하고 실리적으로 하셔서 가지고 국민이 공감하고 또 만족하고 희망을 갖는 이러한 정상회담이 되기를 바랍니다.

2006년 5월에 노 대통령 몽골 발언이 있습니다. “북한에 많은 양보를 하려고 한다. 또 제도적 물질적 지원을 조건 없이 하겠다”. 그다음에 올해 2월에 또 로마 발언에서는 “우리가 북한이 달라라는 대로 다 주고 문제를 해결해도 남는 장사다”, 이런 발언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간 몽골 발언이나 로마 발언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지만 이번에도 투자가 아닌 일방적 북한 퍼주기식 사업이 될 것이라고 또 우려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그것 대통령께서 발언하신 것은 남북관계의 아주 근본적인 또는 획기적인 발전에 대한 강조를 하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번 정상회담에서 강조하고 계신 점은 바로 남북간에 경제협력을 통한 경제공동체, 쌍방간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물론 쌍방의 협력으로 발전시키겠다, 생산적 투자협력을 하겠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벗어나 가지고 그야말로 남북 경제공동체 건설을 지원한다는 이러한 방향하에 국민들 앞에 그렇다면 투명하게 공개가 되어야 되겠지요, 결과가?

○**통일부장관 이재정** 물론입니다.

○**김영숙 위원** 대북송금과 같은……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게 되지요, 대북송금은. 그와 같은 뒷거래, 또 퍼주기식 경험은 그야말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통일부장관 이재정** 지금은 그런 사실이 있을 수도 없고요.

○**김영숙 위원** 왜냐하면……

○**통일부장관 이재정** 정부로서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영숙 위원** 지금 장관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달라는 대로 다 주고 문제를 해결해도 남는 장사다”, 이 발언에서 그런 생각을, 우려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또 “조건 없이 하겠다” 이것도, 조건 없이 한다는 것에 우려가 안 됩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것은 남북관계의 어떤 발전 또는 남북관계의 어떤 방향을 말씀하신 강조점이고 하나의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영숙 위원** 방향은 바로 그 구체적인 사실이 되고 지원 결과를 낳게 되지요. 그렇지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지금은……

○**김영숙 위원** 그래서 지금 구체적으로, 통일부장관께서 지금 준비기획단장을 하고 계시니까 꼼꼼하게 이것을 잘 기획하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제가 서두에 드리는 겁니다.

○**통일부장관 이재정** 예.

○**김영숙 위원**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실망을 주지 않는, 그야말로 정상회담은 구체적으로 잘 준비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야말로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경험 재원이 마련되고 또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공감합니다.

○**김영숙 위원**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바로 옆에 계시는 존경하는 진영 위원이 발표한 자료입니다. 대북 지원 현황에 보면 95년 이후부터 2006년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

체, 정부의 대북 지원 금액이 6조 5800…… 한 6000억 원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12년간 6조 5889억 원을 지원하고서 지금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우리 정부가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남북관계를 잘 관리해서 평화적 관계로 유지해 왔다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영숙 위원** 평화적 관계를 유지했다고요? 지금 핵을 만들어 내고 이렇게 했는데, 이 돈이 핵을 만든 결과를 양산한 게 아닙니까? 그게 무슨 평화를…… 지금 우리 주변은 전부 다 핵 개발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좋은 결과는 아니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물론 핵 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발사한 사실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극복하면서 남북관계를 이렇게 견인해 갈 수 있고 적어도 남북관계가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한 끊임없는 과제를 설정하고 논의할 수 있었던 배경은 역시 그동안의 남북관계의 발전에 기인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숙 위원** 아,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되거든요.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다음은 대통령께서 남북 경제공동체 건설이 한반도 평화에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것에 앞서서 우선 앞서야 될 것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그야말로 7000만 국민의 평화와 안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군사적인 신뢰 구축, 이것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군사적인 신뢰…… 남북간의 신뢰 구축을 이룩하고 군사적인 긴장 관계를 완화하는 것은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숙 위원** 그렇다면 아까 그 남북정상회담 목표에서도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공고히 하겠다, 이렇게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통일부장관 이재정**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렇다면 남북정상회담 의제로서 북핵 문제가 최우선으로 포함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북핵 폐기 문제입니다.

○**통일부장관 이재정** 이 북핵 문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한반도에 진행되어 온 하나의 과제입니다. 이것이 한 번의 정상회담이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완결된다거나 해

결된다고 그렇게 내다볼 수는 없을 겁니다.

지금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6자회담을 통해서 이 문제가 책임 있게 진행되어 나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6자회담에 이런 것이 성공적으로 진전이 될 수 있도록 아마 논의가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영숙 위원** 지금 기본 방향에, 오늘 정상회담 기본 방향에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이것을 잘 실천한다, 이렇게 기본 방향이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이것을 그야말로 이번에 가서 정상이 만나서 이 문제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야지요. 그렇게 생각이 안 됩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아마 이 문제는요, 어쨌든 양 정상 간에 허심탄회하게 한반도의 여러 가지 과제들을 충분히 논의를 하게 되리라고 그렇게 예상합니다.

○**김영숙 위원** 예상할 것으로 생각하시지 말고요, 추진단장이시니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넣어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그야말로 해결해 내는 이것을 좀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통일부장관 이재정** 저는 이 한반도 비핵화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한반도 평화의 대전제고 아주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영숙 위원** 아, 필수적인 과정으로 생각합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예.

○**김영숙 위원** 알았습니다.

경제협력도 좋지만 논의 과정에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국군 포로라든가 또 남북자 송환 문제, 그리고 이산가족 상봉 문제의 해결도 우선 과제로 또 다루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들어갈 것입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구체적인 과제를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직 적절치 않고요. 지금 현재 이런 모든 과제들을 저희가 각 부처와 함께, 또 여러 자문단들의 의견을 들어서 지금 논의하고 정리해 나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김영숙 위원** 아마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아마 거기에서 가장 많이 나올 것은 국군 포로라든가 남북자 송환 문제, 그다음 비핵화 문제, 이런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추측하고 계시지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저는 인도주의에 관한 사항은 우선적인 과제일 뿐만 아니라 이것을 진지하게 논의하고 해결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관께서 서해 북방한계선은 영토 개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는데 이것이 개인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입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정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미 기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남북기본합의서를 통해서 남북 간에 합의한 내용입니다. 1992년에 발표한 남북기본합의서에 있고요.

○**김영숙 위원**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영토 개념이 아니라는 게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이 북방한계선 NLL을 어떻게 남북 간에 유지하고 해야 할 것인가가 이미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지요. 불가침 부속합의서에 보면 남과 북의 해상 불가침 경계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렇지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그러니까 해상 불가침 경계선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해석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형태로 해석하느냐, 성격으로 해석하느냐와 이것을 기능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번에……

○**김영숙 위원** 헌법 제3조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이것을 해석해야 될 것으로 봐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헌법에 있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것을 존중하는 겁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물론입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그 발언하고 조금…… 이게 같은 일관된 내용입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여기에서 정확하게 위원님께서 보셔야 할 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 남과 북이 합의한 내용으로 본다고 하면 해상 불가침 경계선에 대한 것을 앞으로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해상 불가침 경계선이라는 개념과 실제로 지금 영토라고 하는 그런 개념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은요, 이제까지 북방한계선이라고 하는 이 NLL을 우리가 지켜 나가야 할 우리 안보의

하나의 중요한 선으로 이해해 왔기 때문에 영토적 개념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김영숙 위원** 그렇게 이해를……

○**통일부장관 이재정** 그래서 아까도 제가 질의에 답변했습니다마는 국정원장의 답변과 제 답변에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숙 위원** 왜냐하면 73년도부터 서해 5도 백령도라든가 연평도 이것을 포함한 NLL 부근이 북측 수역이라고 주장하고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도적으로, 또 침범도 해서 지난번 서해교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실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발언하고는 적절치 않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많은 북한 전문가들이 NLL 변경을 이번 정상회담 때 김정일 국방 위원장이 그것을 의제로 들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럴 때 NLL이 남북 협상 의제로 논의될 경우에 정부로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겠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이 문제는 이미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남북기본합의서가 가장 중요한 합의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과거 정부가 1992년도에 남북 간에 합의한 일이고요, 이 합의를 존중하는 것이 현재 정부의 책임과 의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합의 내용에 보면 과거에 이미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하여온 구역을 그대로 관할하되 앞으로 계속해서 이 문제를 협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 협의의 가능성을 과거의 정부에서 여기에 설정해 놓고 있고 이것을 남북 간에……

○**김영숙 위원** 그러면 협의하는 것이 계속해 온다면 완화하다는 이야기입니까, 됩니까? 지금 남북 간 해상 영토 경계선이 되어 왔는데 경계선을 그러면 조금 조정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됩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그것을 완화의 개념이든 강화의 개념이든 그렇게 설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이것은 남북 간에 협의를 해 나간다는 원칙을 과거 정부가 설정해 놓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배기선** 김영숙 위원님, 시간을 더 많이 드렸습니다. 정리를 해 주시지요.

○**김영숙 위원** 제 말씀의 의도를 아시지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기선** 그러니까 우리 장관님 말씀을 제가 이해할 때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게 냉전 시대에 그동안에 우리가 우리 국민의 안전과 특히 서해 어민들의 어로 활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군사적으로 이 NLL을 지켜 왔는데, 냉전 시대에 그동안에. 그런데 이것이 이제 통일 지향적인 새로운 시대에 이 지역에서 이것이 갈등과 어떤 통일 지향적인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내는 데 자꾸 부딪치고 갈등을 야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리가 더 큰 안보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지난 92년에 기본합의에서 합의된 대로 우리가 앞으로 이 갈등을 해소해 내는, 남북 간에 합의하고 협의할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신다, 이런 말씀인가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이것은 남북기본합의서가 정해 놓고 있는 그 규정이 지금 유일하게 남북 간에 합의된 내용입니다. 다만 저는 앞으로 이 NLL 설정을 놓고 가령 이것을 논의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관점에서 보기보다 이것이 갖는 가치와 이것이 갖는 하나의 실질적 효과, 다시 말씀드리면 남북 간 긴장 완화를 하고 군사적 충돌을 막아 나가고 우발적 충돌을 막는 장치를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다음에는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어민들의 권익을 어떻게 보호해 갈 것이냐, 이 두 가지가 우리들의 하나의 관심사가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NLL 문제의 재설정이라든가 혹은 완화하느냐 강화하느냐 이 문제를 떠나서 이 문제는 남북 간에 합의된 1992년 합의서의 정신을 존중한다고 하면 이것이 재협의될 때까지 현재의 선을 유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 합의가 현재의 선을 유지한다는 현상 유지에 역점이 있느냐 또는 남북 간에 역시 한 번 더 협의할 가능성이 있느냐, 이 두 가지의 관점은 앞으로 해석의 여지가 있겠습니다만 현재 정상회담에서는 이 문제를 놓고 논의한다 하더라도 역시 한반도의 평화 또 남북 간의 평화 정착이라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배기선** 그러니까 이 문제에 관한 남북 간 합의된 공통의 목적은 이 지역에 있어서도 우리는 분명히 평화와 공동의 이익을 지켜 낸다는 공동의 목표는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2005년도 남북어로협정에서 앞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이미 합의가 되어 있고, 뭐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건가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그렇습니다. 남북 간 하나의 합의된 내용…… 또 하나가 지금 위원장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남북 간의 해운 관계 협의가 6·4 합의서 속에서 보면 남북 간의 그러한 어로 작업이라든가 해상 통로 같은 그런 문제들을 협의하고 있는 해운 합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앞으로 하나하나 발전해 나가면서 역시 남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배기선**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가 계속 되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다음은 우리당의 장복심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심 위원** 장복심 위원입니다.

11시부터 의총이 있어서 우윤근 위원님께 양해를 받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어제 8·15 경축사를 통해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욕심 부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국민들이 상당한 안심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감사를 드립니다.

북한의 체제 등을 고려할 때 성공적인 정상회담의 필수요건으로 남북한 최고지도자 간의 의사소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동의하십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예.

○**장복심 위원** 이번 정상회담은 남북한 평화공존을 제도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맞습니다.

○**장복심 위원** 그런 의미에서 남북 정상 간 의제의 확정을 너무 고정시키는 것보다는 큰 틀에서 모든 주제를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남북 간 정상회담의 1차 정상회담 진행된 경과를 보더라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상 간 격의 없이 여러 과제들을, 관심사를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복심 위원** 그런 의미에서 국민들의 여망을 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남북한 정상 간의 핫라인 개통, 그것이 지금 안 되고 있지요? 그래서 정례적 또는

특별 사안 시 정상 간의 진솔한 대화가 자주 그리고 계속 시행되기를 기대합니다. 꼭 좀 성공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북한의 취약 부분 중 중요한 것이 의료 지원, 의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북평화의료지원단을 결성해서 수시로 또 필요시마다 상호 지원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장관님께서 그 부분도 좀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남북한 국회, 저쪽은 아마 인민회의가 되겠습니까? 하여튼 그런 대표 부서를 결성해서 상호간 정상 간에 할 수 없는 부분들을 풀 수 있는 그런 어떤 틀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제가 부탁 겸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것은 중요한 사안일수록 첫술에 배부를 수가 없고요. 또 대화를 하다 보면 의외로 좋은 부분이 많지, 나쁜 부분보다도……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열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주석 간의, 최고지도자 간의 정상회담이 남북한 모든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좋은 회담이 되기를 기원하고 장관님이 많이 좀 애써 주시기를 국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기선** 아주 좋은 질의를 해 주신 장복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신당의 우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근 위원** 전남 광양·구례 출신의 우윤근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정 장관께서 이 중차대한 시기에 남북정상회담 준비단장을 맡음으로써 국민들이 거는 기대가 크고 본 위원도 기대가 큼니다. 잘할 자신이 있으신지……

○**통일부장관 이재정**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우윤근 위원** 본 위원이 평소에 남북 관계에 대해서 일천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만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남북 관계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남남 간의 갈등이 아직 해소되지 않고 있다, 또 남북 당국 간에는 신뢰 또는 이행에 관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큰 틀에서 동의하시는지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예, 그런데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지지가 한 7, 80%를 넘는 아주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지지해 주시고, 하나

의 남북 간 관계 개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윤근 위원 본 위원도 7, 80% 이상 국민들이 남북정상회담은 지지할 것으로, 대화의 필요성은 지지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그 시기와 방법, 내용, 수단들에 대해서는 아직도 특히 여야 간에도 갈등이 잔존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지요, 그 부분은?

○통일부장관 이재정 예, 이 정상회담은 사실상 민족사회에서 긴 과정을 놓고 보면 대단히 중요한 사실이고요, 이것을 정치적 어떤 이해관계로 보는 것은 우리가 경계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윤근 위원 제가 한 7, 8년 전에 개성공단…… 간의 여러 가지 합의를 할 때 법률 부분을 맡아서 직접 협상에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300페이지가 넘는 기본합의서를…… 직접 협상팀으로 참여한 경험이 있는데 당시에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느낀 것은 북한 문제를 여러 가지 경제협력뿐만 아니라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이것을 상생하고 경제협력 강화를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겠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북한이 이렇게 되기까지는 북한 내부의 문제가 있다, 특히 지도자들에 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래서 스스로 망하든지 내부적인 어떤 문제가 노정이 되어서…… 그렇게 보는 시각들이 있는 것을 제가 체험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여야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정상회담 합의 또는 대화를 통한 해결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확신을 갖고 준비를 하셔도 좋다고 생각하고 존경하는 동료 위원들이 의제 설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우선 이런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는 우선 위임한 국민들이 믿어 줘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설사 정과 간 이해관계가 다르고 서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굳건한 신뢰를 보내 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또 정부로서는 좀더 투명하고, 법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을 설득하고 여야 지도부를 설득해 내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다소 조금은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국민들이 하

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존경하는 심재엽 위원이 질의를 하고서 답변을 듣지 않았는데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국정원을 통해서 한 것은 다소 국민들이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이유가 있었던가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그것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보면 대통령은 특사를 파송할 수 있고요, 그 특사가 대통령의 특별한 임무를 띠고 북측과 교섭하게 되는데 이번 경우는 공식적으로 국정원장 자격으로 간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특사로서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한 협의를 위해서 방북을 했고요. 여기에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특사의 임명을 받아서 갔기 때문에 이번 일을 국정원이 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조금 무리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윤근 위원 뭐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정원이 갖고 있는 업무 성격상 다소 양지에서 일하기는 부적절한 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를 국민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앞으로는 이재정 장관이 능력도 있으시고 충분한 그런 경험도 있기 때문에 좀더 주도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통일부장관 이재정 그것은 우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만 과거 김대중 정부 때도 박지원 문화관광부 장관이 특사 자격으로 간 것과 마찬가지로 또 노무현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에도 지금 현재까지 특사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마는 반드시 통일부장관이 하라는 법은 없고 그렇습니다.

○우윤근 위원 좋습니다.

의제 설정과 관련해서 선배·동료 위원들이 많이 질의하셨는데요. 기본적으로 본 위원은 남북 정상회담에 관한 의제가 국민들의 요구와 합의에 의해서 설정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 구체적인 실행 시기랄지 방법에 있어서는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하고 다소는 또 비공개되어야 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NLL 관련해서는 위원장님도 조금 전에 해석을 구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헌법의 영토와 관련된 내용이기도 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마냥 우리가 헌법에 규정된 영토, 주권, 이것만으로 내세워서 남북회담이 진전되기 어렵고 현실적으로 또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일어난 바가 있

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쨌든 협의의 대상이다, 이것은 지금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분쟁을 앞으로 남북 간의 협의에 의해서 평화적으로 해결하자, 이런 의도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그것은 경계선 확정에 대한 문제를, 경계선에 대한 문제를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는 남북 간에 협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열어 놓고 있다고 해석합니다.

○**우윤근 위원** 국민들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영토를 북한에 양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일반 국민들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와 설명이 있어야 되겠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랫동안 우리가 영토를 수호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 점에 대한 좀더 국민들의 이해와 설득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통일부장관 이재정** 우리에게서 결국 국민주권을 어떻게 수호해 가느냐, 국민의 어떤 재산과 국민의 권한을 어떻게 보호해 가느냐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연구 검토를 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윤근 위원** 마지막으로 당부는 남북 간의 협상, 여러 가지 협상이 다 일반적인 원칙이겠습니까마는 절대적으로 일발 KO를 노린다거나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고 상당한 인내와 지혜가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여야는 물론이고 국민들에게도 정부에서 충분히…… 남북 관계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다,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한 인내와 지혜를 갖고 또 정파적 이해관계를 넘어서 당국, 추진하는 정부가 국민들에게 신뢰를 먼저 얻어야 된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협상하는 사람이 위임을 한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지 못하면 협상력 자체가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재정 장관을 비롯한 정부에서 또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우선 국민들의 철저한 신뢰를 바탕으로 협상에 임해야 되지 않나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통일부장관 이재정** 최대한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윤근 위원** 많은 기대를 걸고 고생하십시오.

○**위원장 배기선** 우윤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노동당의 천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세 위원** 현 정부의 임기로 보면 정상회담이 꽤 많이 늦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6개월 임기 앞두고 이렇게 되는데, 그러나 한반도 주변정세나 남북관계의 중요한 시점에서 본다면 정말로 이번 2차 정상회담이 중요한 시기에 열린다고 봅니다. 저희 민주노동당은 이미 성명을 냈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이것을 환영합니다.

우선 몇 가지 한번 확인차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의 정청래 위원께서도 그런 질의와 확인이 있었는데 이번 정상회담이야말로 이것이 어떤 정략적인 사안이 아니다, 정말 이 땅의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중대한 역사적인 과제 앞에 어떤…… 앞의 다른 위원들도 누누이 강조가 됐습니다마는 초당적인 참여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 아까 앞에서 다른 위원은 한나라당 대표의 적극적인 설득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물론 1차 정상회담 때도 그런 방침을 갖고 진행했습니다마는—이번에 초당적인 각 당을 대표하는 정치 지도자의 참여를 대개 어떻게 구상하고 계십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현재 대표단 구성의 총체적인 수만 결정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하느냐는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치권 전체의 초당적 참여를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영세 위원** 알겠습니다.

정상회담, 정말 성공적으로 개최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 남북 공히 양쪽 다 전제해야 될 사전조치들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실제 일정은 얼마 안 남았습니다마는. 그러기 위해서 우선 남측에서 좀 유념해야 될 사항이……

20일부터 31일까지 한미합동군사훈련인 을지포커스렌즈 훈련이 추진되게 되어 있지요? 한국군만의 독자적인 훈련은 연기할 것으로 정부의 방침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김만복 국정원장은 13일 국회 정보위에 참석해서 가지고 “을지포커스렌즈 훈련을 연기해도 괜찮다” 그런 답변을 했었는데 통일부장관으로서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이 연습은 사실상 상례적인……

○**천영세 위원** 연례적인 훈련이지요? 그런데 상당히 민감하게……

○**통일부장관 이재정** 상례적인 연습이고 오래전에 계획되어서 진행되어 오는 연습이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당초 계획된 대로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만 다만 정상회담의 중요성 또 정상회담이 갖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단히 중요한 과제들을 염두에 두고 을지훈련 가운데 우리 군의 단독기동훈련 그 부분에 대한 것만 연기해서, 그것은 꼭 이 시기에 할 일은 없는 거니까요, 아무튼 그것을 연기해서 실시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천영세 위원** 정상회담이라는 것이 수시로 가질 수 있는 회담이 아니고 전략적인 또 세부적인 현안들을 다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특히 이 합동훈련이야말로 연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뒤로 연기한다든지 조정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참고로 하시지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그래서 시기만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천영세 위원** 17대 국회가 한 1년여도 안 남았습니다마는 17대 국회 들어와서 처음에 가장 뜨거웠던 현안 과제가 국가보안법 문제였습니다. 폐기하느냐, 두느냐 국회가 아주 시끄러웠는데 지금은 이것이 참 어떻게 보면 생똥하고 생소한 과제처럼 이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이 17대 국회가 끝나가는 마당에 지금 2차 정상회담을 결정한 이후에 우리 안팎에서 정상회담의 정례화 필요성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그렇습니다.

○**천영세 위원** 이런 속에서 지금 정부 차원에서라도, 물론 지금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는 있습니다마는, 이 정상회담 이전에 지금까지 걸림돌이 되어 왔던, 그다음에 반민주, 반인권, 반통일, 모든 인권과 모든 민주주의에 반하는 어떤 상징처럼 되어 있던 국가보안법 폐기를 전격적으로 한번 선언할 의향 없으십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이 문제는 아마 남북 간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남북관계가 보다 더 희망적으로 발전하고 한반도 평화가 정착된다고 하면 이미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이 법에 대해서 국회 차원에서 국민적 의견을 참작해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천영세 위원** 앞으로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예.

○**천영세 위원** 그 이전에는 또 남측 내부에서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우려하는 점 때문에 그러신 거지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지금 현재 정상회담을 불과 열흘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거론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천영세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민주노동당과 지금 이것 폐기를, 또 이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해 온 부분과 함께 이후에 독자적으로 저희들이 제기하고 특히 9월 정기국회에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NLL 문제 계속 얘기가 됐는데 이 부분은 이번에 어차피 의제로 얘기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부분들은, 지금 자체적으로 똑 떨어지게 의제를 세부적으로 정리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지금 방향은 대개 잡혀질 수밖에 없겠지요?

아까 몇몇 위원님들 계속 조금 다른 시각에서 제기는 있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다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것이 과제로 설정된 것이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서 설정된 이후에 지금 벌써 16년이 지나도록 거의 손을 못 댄 과제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이것이 꼭 과제로 채택되느냐 안 되느냐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하여튼 이것은 양 정상 간에 판단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천영세 위원** 큰 방향에서는 정상회담에서 원칙을 원칙 선에서 합의하고 해결을 보고 그다음에 국방부장관회담이나 이런 쪽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다룰 수도 있겠지요.

아까 이번 정상회담 의제나 여러 가지 필요한 사항을 각계각층 특히 정치권의 의견수렴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일환으로 지금 각 정당 방문해서 설명회 갖는 것 이외에 각 당 대표 청와대 회동 이런 계획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오히려 초당적으로 전 국민적인 협력과 지지를 모아가기 위해서도, 어떻습니까, 기획단의 단장으로서?

○**통일부장관 이재정** 이 문제는 제가 결정할 문제는 아닙니다만 천 위원님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영세 위원** 그렇게 하시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몇 분 안 계신데, 이것은 정부 측에 제안이라기보다는 우리 자체 위원회에…… 우리가 남북특위, 남북특위 하는데 지금 열리고 있는 이 특위가 실제 민족화해와번영을위한남북평화통일특위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특위의 명칭이 상징하고 있듯이 우리 특위의 위상과 성격과 기능에 비추어서 사실은 의회에서 가장 중심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심의하고 실천에 옮겨야 될 부분이 바로 정상회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참여 문제, 대표단에 들어가는 문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최소한도 오늘 또 이렇게 특위가 열리는만치 그런 것들이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내부적으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초당적으로 지지하고 함께 하는 선언적인 뭘…… 성명이 됐든 뭐가 그래도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것 구상이 있으시면 한번 답변을 주시고요, 아니면 여기서 그것을 안전화해서 논의해서 이 특위에서 다루어 주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난번 회의에서, 그전 회의에서도 계속 얘기가 됐던 사항입니다. 국회 차원의 회담…… 정당 차원의 교류협력도 일부 정당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당국자 간에 2차 정상회담이 열리는 마당…… 지금 모든 민간 차원에서의 교류협력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빠져 있는 곳이 의회, 국회 차원입니다. 17대 국회가 얼마 남지는 않았습시다마는 이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체계에, 2차 정상회담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는…… 그것은 전에든지, 후에든지……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 얘기해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추진하는……

그래서 만약에 이번 정상회담에 정치권에서 국회를 대표해서, 각 당을 대표해서 간다고 그런다면 북측의 인민회의 대표들이 당연히 그 자리에 함께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공식적으로 적극적으로 제안해서 이 부분을 꼭 좀 성사를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아울러서 6·15 공동선언에 대한 국회 차원의 결의안이 지금 배기선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많은 다수 의원들의 공동발의로 지금 국

회에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더불어서 이것이 지난번 전반기 김원기 의장 시절에 의장단 있을 때 8·15 기해 가지고 북한 대표단이 국회를 처음으로 방문했을 때 서로 오고 간 부분입니다.

92년도의 남북기본합의서, 그다음에 7·4 공동성명, 6·15 공동선언은 물론이고 이런 중차대한 결의에 대하여 국회 차원, 입법부에서 아무런 결정이 없다고 그러는 것이…… 그래서 이에 대한 추진도 6·15 공동선언의 추가 결의와 더불어서 이런 것들을 우리 특위에서 추진해 갔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면서 끝으로, 아까 위원장님도 서두 인사말 속에서 말씀이 있었는데, 호사다마인지 남측도 지금 홍수 피해가 많이 있습니다만 북한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미국을 비롯해서 유엔 국제사회에서 인도적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아마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우리는…… 정부야말로, 더군다나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속에서 화급하게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원했으면 합니다.

○**통일부장관 이재정**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북의 수재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이번 수재가 과거 어느 때의 수재보다도 굉장히 큰 규모로 이루어진 것 같아서 저희가 통일외교안보조정회의에서도 이미 이 수재에 대한 현황 청취를 하고 대책협의를 했고요, 지금 북의 상황이 어떤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가 하는 전통문을 보내서 북측의 의사도 이미 타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 정부로서는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이번 수재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영세 위원** 아까 성명이나 무슨 구상이 있으시면, 아니면 뒤에라도 안전으로 얘기를 한번 해주시지요.

○**위원장 배기선** 지금 천영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특위 차원에서 이번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성공을 기원하는 지지성명 같은 것을 한번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또 국회회담이 앞으로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냐, 또 6·15 공동선언에 대한 기념일 지정 문제, 이 세 가지를 적절하게 지적해 주셨는데요, 위원장으로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7년 전의 1차 정상회담 때도 국회가 즉각적인 지지성명을 낸 바 있습니다. 그때 제가 초안을 준비하는 준비위원으로서 한나라당의 이

한구 의원과 3일 동안 준비해서 성명을 냈고 그것을 국회 본회의에서 결의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충분히 그런 절차가 있었으면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특별히 국회 본회의를 정상회담 전에 열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가능하면 오늘 각 당의 대표 간사님들께서 합의를 해 주신다면 저희가 그것을 적절하게 합의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국회회담 문제는 그동안에도 죽 추진해 왔는데 이번 정상회담 이후에 그 성과를 더욱더 진전시키고 또 양쪽 국민들 간의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대한, 특히 경제협력에 관한 폭넓은 공감과 지원을 위해서도 국회회담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도 그 점에 있어서는 협조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6·15 이 문제는 이미 162명의 의원들께서 서명을 해 주셔서 과반수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저희가 각 당 대표들 간에 적절하게 협의해서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162명의 의원들이 지지성명을 하고 이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데 동의했기 때문에 사실은 정부 나름대로의 판단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이 문제는 전 국민적인 또 초당적인 협력 속에서 향후에 한반도 평화·번영의 기본 발전의 기초를 아까 지적하신 7·4 공동성명과 12·11 기본합의서 그리고 6·15선언의 철학과 비전과 원칙 속에서 함께 나가자, 아마 이것을 함께 합의한다면 여야가 다 같이 합의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드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성 위원 관련해서 짧게 한 가지……

○위원장 배기선 최성 위원님!

○최성 위원 민주노동당의 천영세 원내대표님께서 평화통일특위 결의안을 말씀하셨는데 전폭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런데 결의안은 결의일 뿐이지 실제로 국회가, 평화통일특위가 지원할 수 있는 차원에서…… 과거 배기선 위원장님이 제안해서 가지고 개성공단지원소위가 꾸려졌었는데 이제는 남북정상회담지원소위를 평화통일특위 산하에 구성해서 한반도 비핵화라든가 남북경협 또 사회문화 교류 또 교류협력기금을 포함한 법·제도적인 지원 이렇게 해서 한나라당 위원님들 경우는 비핵화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비핵화 소위에 들어가시고 또 교류협력기금에 관심 있는 분 해서……

저는 이것은 오늘 타이밍을 놓쳐 버리면 실제 어렵기 때문에 결의안 및 평화통일특위 산하에 남북정상회담지원소위 구성하는 것까지를 위원장님께서 각 당에 있는 간사님들하고 협의해서 가지고 결의안 및 지원 소위를 만들면 상당히 뜻깊고 또 실질적인 도움이 되겠다 하는 부분을 같이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기선 지금 최성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주셨는데, 지금 결의안을 결의하려면 오늘은 의결정족수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먼저 퇴장을 하셔서 다시 돌아오시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음 질의하실 순서가 진영 위원인데 지금 간사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다른 위원님께 순서를 양보해 주시면 그 사이에 간사회의를 하시고 그다음에 질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질의를 먼저 하시고 다음에 간사회의를 해 주시겠습니까?

○진영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배기선 진영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나서 질의 마치시면 간사회의를……

○진영 위원 그전에, 간사회의를 할 간사가 어느 분이십니까, 지금?

○위원장 배기선 간사는 오영식 위원하고 진영 위원이지고요, 민주신당……

○진영 위원 간사가 전혀 선임되지도 않았고 여기서 언급된 적이 없기 때문에 간사회의가 지금 성립되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배기선 간사회의가 안 되면 각 당 임시대표회의를 통해서……

○진영 위원 지금 오영식 간사도 안 계신 것 같고……

○위원장 배기선 곧 올라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질의를 듣고 난 다음에 협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우선, 다른 위원님이 한나라당 입장에 대해서 언급하셔서 가지고 제가 한나라당 간사로서 한나라당 입장을 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상회담에 대해서 한나라당이 반대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와 다른 얘기를 한다, 우리 당과 다른 의견을 얘기한다는 것이 자꾸 갈등조장적이고 비생산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자유주의국가, 자유 정당에서는 있을 수 없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와 생각이 다를 수 있고, 나와 반대 의견을 얘기해도 그 생각이 충분히 생산적이고 그 생각이 더 좋은 결론을 내기 위한 의견 진술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자유주의국가에서 확립된 원칙 아닌가요?

그래서 정상회담에 관해서 저도 환영한다고 얘기했고, 많은 한나라당 의원이 환영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대가 큰 만큼 걱정도 많기 때문에 그 걱정되는 부분을 대신해서 얘기하는 것인데 그것을 마치 정상회담을 자꾸 방해한다든지 훼손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저는 자유주의 정당에서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당 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아닙니까? 지도부에 반대 얘기를 하면 이것 무슨 갈등조장적이고 비생산적인 어떤 것으로 자꾸 받아들여 가지고 그 사람에게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하고 이런 경향이 있어요, 정치권에서도.

그러나 저는 반대 의견을 생산적인 것으로 보고 보다 더 좋은 결론을 내기 위한 노력이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자유주의국가, 자유주의 정당에서는 반드시 있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보고, 정상회담도 그런 차원에서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그러기 위해서 더 잘 되어야 되지 않나…… 정상회담은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7년 만에 열리는 것이고, 국민은 7년 전에 비해서 북한이 얼마나 변했나 이런 것도 보고 싶은 거예요.

아까 어떤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교류도 많이 했고 우리가 지원도 많이 했고 왕래도 많이 했고 이렇게 했으면 그 사이에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은 얼마나 변했나, 북한 정권은 얼마나 변했나 이런 것도 보고 싶은 거예요, 이런 정상회담에서. 그런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노력해야 될 책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재정 장관님이 오늘 죽 말씀하신 것을 보면 본류에서는 좀 벗어나 계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절차적인 문제 이런 것을 단장으로 죽 협의는 하십니까마는, 우선 다른 위원이 지적하셨듯이 그 당시 특사는 이재정 장관께서 가져야 맞지 않나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국정원장 지금 바쁘잖아요? 아프간 사태 인질

이 내일모레 생명이 위독한 상황에 있고 하니까 국정원장으로서 대북 문제에 매달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또 당연히 의당 이재정 장관께서 특사로 가져야 될 것 같이 생각했는데 국정원장이 가신 것에 대해서 이재정 장관께서는 좀 비켜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다 지적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의제를 잘 모른다’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는데, 오늘 많이 나온 것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북핵 문제를 어떻게 진전시키느냐…… 북핵 문제에 대한 진전은 6자회담 관계다, 이것은 북미 관계다, 우리는 그것은 상관할 바 아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절대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진영 위원** 그런 입장이 아니니까, 북핵 문제에 어떤 진전을 보지 못하면 남북회담의 역사적 의미는 반감되는 겁니다.

또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해외 여러 나라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해외 여러 나라의 관심은 한반도 비핵화하고 북핵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반드시 북핵 문제에 대한 어떤 진전을 이루어야 되겠다는 국민적 소망이 있는 것이고요. 기대가 자꾸 높아져 나중엔 혹시 얻은 것이 없어서 실망할까 봐 지금 자꾸 “그것 방해가 돼서는 안 된다, 그것 너무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 하는 것은 사실 국민의 뜻과는 다른 거예요. 올림픽 나가는데 “너는 금메달 딸 실력은 안 되니 메달은 못 따더라도 등수 안에 좀 들어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라고요. 다 금메달 따오라고 그렇게 격려를 하고 또 부탁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리이러한 부분을 꼭 좀 달성해 주십사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국민의 기대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북핵 문제는 이번에는 반드시 진전을 이루어야 국민도 평가하고 또 외국에 있는 나라들도 평가하고 역사적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진전을 이루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많은 위원들이 NLL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재정 장관께서 하는 얘기가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남북기본합의서를 만들 때 추가합의서에서 앞으로 최종적으로 결론을 논의하도록 이 부분을 열어 놓았는데 최종적 합

의가 되기 전까지는 현재의 경계선을 지키도록 되어 있잖아요. 현재 정전협정에서 했던 실효적 지배를 인정하기로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이 부분을 북한이 인정했습니까, 지금까지?

남북기본합의서를 91년도 12월 13일인가 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잠정적으로 인정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앞으로 최종적으로는 불가침 불가합의서에서 해상불가침 경계선을 최종적으로 정할 때까지는 현재의 위치를 준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맞지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그것은 양측이 지금 그렇게 준수해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영 위원** 북한이 준수했나요, 지금?

○**통일부장관 이재정**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영 위원** 북한이 준수한 것이 아니라 99년 7월에 조선 서해 해상분계선을 선포했지요, 일방적으로?

이거 합의했나요, 북한이?

○**통일부장관 이재정** 합의한 바가 없습니다.

○**진영 위원** 일방적으로 선포했죠. 준수한 거 아니잖아요?

새로 합의할 때까지이지 뒤집고…… 그다음에는 준수하기로 돼 있는데, 새로 합의할 때까지라고 열어 놓은 부분은 언제든지 합의해서 바꿀 수 있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한반도 비핵화도 해결되고 또 남북 간 평화체제도 해결이 되고 또 여러 가지 남북 관계가 원만히 다 해결됐을 때 그때 논의해서 다시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우리가 합의한 거지 아무 때나 뭐, 북한이 핵실험까지 하고 있는데 아무 때나 이거 다시 해서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열어 놔다 하더라도 지금은……

이재정 장관께서도 아까 다시 말씀하셨잖아요, ‘영토적 개념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라고 했고. 이 부분은 국방부에서 나온 자료가 있어요, 국방부가 홍보자료를 낸 게 있습니다. 한 50여 페이지 되는 홍보자료인데, 국방부가 이 부분을 정리를 너무 잘해 놨어요. 국방부의 입장은 확고하더라고요. 우리는 NLL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 사수해야 된단 말이지요. 다만 나중에 합의할 가능성은 있다 이런 부분도 물론 열어 놔고 또 공동어로수역을 정해서 합의하면 어떠냐, NLL에 대해서 서로 일단 일정한 거리를 양보해서 같이 공동어로를 하고 또 그에 대한 어떤 이익도 서로 같

이 나누는 윈윈 작전으로 가는 게 어떠냐 이러한 거는 해 놔지만 원칙은 명확하게 거기에 선언해 놔어요, 국방부에서.

○**통일부장관 이재정**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기회를 좀 주시면……

○**진영 위원** 예, 말씀하세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제 의도는 이 NLL 자체의 존재와 가치를 무시하거나 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다만 과거에 서해 해상에서 있었던 불행했던 그런 어떤 무력충돌 사고나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장치를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그것이 통일부로서는 하나의 큰 관심사이고요.

이번 정상회담에 있어서도 역시 NLL 자체보다는, 어떻게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더 발전시켜서 평화적 관계를 유지해 가느냐 이것이 하나의 관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측에서 잘못된 거 있나요? 없잖아요. 북한의 도발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런 부분에서 북한을 잘 납득시키는 일이 중요하지요, 중요하고.

하여간 아까 지지 선언문에 대해서 여야 합의로 한 제안이나 이런 부분에서 천영세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은 우선 여야 간사가 합의하기 어렵거든요, 상황이 돼 있지도 않고. 또 참석한 위원 분들의 수가 너무 적어서 오늘은 상당히 부적합한 일이고, 저는 그 부분은 다시 더 논의를 해서 추후에 얘기할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북한의 서해안 지방에 특히 막대한 손해가 나서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인도적 지원, 이런 부분은 통일부에서 적절히 생각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 지원할 것은 지원하되 얻을 것은 반드시 얻어야 된다 이런 게 저의 입장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기선** 좋은 질의를 해 주신 진영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시면 아까 천영세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지지성명 또는 우리 위원회의 여러 가지 입장을 정리하는 이 문제에 관해서 협의를 좀 해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저는 이 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시기를 만약에 놓치게 되면, 정상회담 이후에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또 각당 대표들 간에 이런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 하게 된다면 오늘 각당 대표들께서 전체적으로 합의를 해 주시면, 또 때에 따라서는 몇 분의 대표위원들에게 위임을 해 주시면 적절한 내용을 담아서 지지성명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최성 위원** 위원장님, 그 문제는…… 진영 간 사님 말씀은 오늘 하기 어렵다는 사안이니까요, 위원장님께서 수석전문위원하고 협의하셔서 결의안과 소위에 대한 기본안을 마련하시고 진영 간 사님이나 각 당의 대표위원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 합의를 도출하면 내일이든 모레든 위원장님과 각 당 대표위원들 간에 결의를 표하고 나중에 그 부분을 추가로 평화통일특위에서 의결하는 과정을 거치면 여전히 유효하게 논의할 수 있는데, 오늘 당장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부분이니까 그것을 위원장님께 일단 일임해 드리고 나중에 추가 의결은 평화통일특위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배기선** 그러면 최성 위원 말씀대로 그것을 추진하되, 위원장이 각 당의 간사나 대표들과 협의해서 적절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민주신당의 지병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병문 위원** 요새 북한 핵 문제가 6자회담의 틀 안에서 해결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 지금 6자회담 당사국이나 우리 정부도 그렇게 보시는 거지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그렇습니다. 6자가 균형과 형평의 원칙에 따라서, 지금 6자의 틀 안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진행 중에 있는 것이지요.

○**지병문 위원** 결국은 북미 관계도 급속하게 진전될 가능성이 있다, 이게 지금 전문가들의 얘기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앞에서 천영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남북정상회담은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6자회담이나 또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로 볼 때 지금이라도 하게 되는 것은 대단히 반가운 일이다, 만시지탄이 있으나 반가운 일이다 이렇게 보는데 과거에 우리가 제네바 합의 때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사실은 미국과 북한이 협상을 하고 남한(한국)은 배제된 상황에서, 나중에 경수로를 만들기 위한 한반도에너지기구가 만들어졌을 때 그 부담의 4분의 3은 우리 정부가 맡지만 협상에서 우리는 배제되는 이런 좋지 않은 경험

도 있습니다.

현재 이 6자회담이 진행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나 또는 북미 관계의 진전 상황으로 볼 때 남북 간에 정상회담을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바람직한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의 경우에도 70~80%가 압도적으로 지금 찬성을 하고 있다…… 결국은 이런 상황에서 일부 정치인들이 말을 바꿔 가면서 자꾸 시기와 의제가 문제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 남북과 같은 이런 상황에 있는 나라를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무슨 정상회담을 추진하면서 그걸 공개하고 동의를 얻고 그렇게 어느 나라가 추진을 합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통상 정상회담의 의제라고 하는 것은 대개 포괄적 표현만 하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정상 간에 논의들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이것을 위한 사전 실무급의 논의들을 합시다만, 이번 우리 실무급들의 논의를 통해서 남북 간에 대략 논의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제를 합의서에 나와 있는 세 가지의 큰 틀의 의제로 합의를 한 겁니다.

○**지병문 위원** 한나라당이 자꾸 이 문제를, 이 정상회담 자체가 정략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부정적인 얘기들을 토하고 있는데,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그렇게 해석하고 접근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햇볕정책을 계승한다라고 하는 민주당에 있어서도 민주당의 대통령 예비후보라고 하는 조순형 의원 같은 경우에는 ‘시기 문제, 의제 문제에 대해서 부적절하다’라고 해서 정상회담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거든요. 이런 건 장관님이 답하시기, 입장이 좀 어려우신가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그 시기의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남북 정상 간의 시기의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쪽의 판단으로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번에 이 회담이 열리게 된 것도 북측에서 역시 한반도의 여러 가지 상황의 발전 또 국제 사회의 어떤 변화, 이런 상황에서 적절한 시기라고 북측에서 판단해서 우리도 동의를 하고 모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정상회담은 역시 양측의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병문 위원** 회담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사실 가능하면 빨리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을 실현함으로써 남북 관계가 안정적이고 평화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걸 지난 7년 동안 꾸준히 요구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북한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늦어진 것이다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합니다.

우선 좀 구체적인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 정부가 이 부분을 좀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제가 제안을 하겠는데 NLL 문제의 경우 자꾸 국정원과 통일부, 국방부의 견해가 다른 것처럼 그래 가지고 자꾸 언론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정치권에서도 그러는데, 장관님께서는 견해 차이가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입장인데 국민들에게는 이게 견해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일부에서 그렇게 지적을 하니까 오히려 국정원과 통일부 국방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국민들이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이 점에 대해서는 이미 정부 측에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만, 그리고 오늘이 자리에서도 제가 분명히 설명을 드립니다만 정부 내에서는 이것에 대한 해석상의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제가 요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NLL이 가지고 있는 그 기능과 역할에 대한 것을 강조해서 저는 말씀을 드렸고, 김만복 원장님은 그 성격과 형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마치 다른 것처럼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용은 같습니다.

○**지병문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이 그겁니다. 그것이 같은 내용인데, 지금 장관님께서 차이가 없다고 그러는데 듣는 국민의 입장에서, 또 그것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부각시키려고 하는 그런 견해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깔끔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또 의제 문제 얘기들을 자꾸 하는데, 사실은 남북경제공동체 문제를 대통령께서도 어제 제안을 하셨는데 이번 정상회담 같은 경우 제일 중요한 문제가 사실은 경제공동체 문제하고 군사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동안에 우리가 북한에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 퍼주기랄지 이런 비판을 많이 했는데, 결국은 그동안에 이 대북지원이 긴급

지원 또는 인도적 차원의 지원 이런 식으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북한 지하자원의 공동 개발이랄지 또는 북한의 투자와 관련된 북한의 인프라 구축이랄지 SOC를 건설한다랄지 이렇게 해서 남북의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경제협력과 경제공동체 구축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 이런 부분으로 좀 논의가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그렇게 진행이 되리라고 보시지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병문 위원** 특히 지금 남북 경협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자꾸 장애가 되는 게 사실은 군사적 신뢰 문제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북한도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군축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군축 문제에 대해서도 이번에 일정 정도 진전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이 문제는 결국 한반도 평화 정착이라는 아주 큰 틀 안에서 역시 논의돼야 될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하나의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아주 중요한 과제라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지병문 위원** 그래서 현재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예.

○**지병문 위원**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가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제협력이 좀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진행이 되고 실질적으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산하에 사실 남북 공동의 어떤 상설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대해서 남한이 북한에 투자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 같은 것도 구체적으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산하에 상설기구를 만드는 이런 부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앞으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병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기선** 지병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중심당의 류근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柳根燾 委員** 류근찬입니다.

통일부장관께서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앞서 존경하는 천영세 위원님께서 간단하게 언급이 계셨습니다만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서 후반에 간단하게 질의를 하기로 하고, 북한의 집중호우 문제를 몇 가지 여쭙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것하고 지금 외신들이 보도하는 내용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저희가 매일 북한의 수재 피해 상황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상당히 큰 수해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외신이 보도하는 것과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柳根燾 委員** 외신을 유심히 보면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인가요, 한 나흘 동안 대동강 중상류 지역에 쏟아진 비가 600mm 정도 되었다고 그러합니다. 지금 북한의 연평균 강우량이 한 1200mm쯤 되는데, 그러면 나흘 동안에 1년에 올 비가 절반이 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예.

○**柳根燾 委員** 그래서 지금 평양을 중심으로 한 주변 지역, 황해남도 황해북도 평안남도 함경남도 이런 지역에 집중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집이 떠내려가고, 공공건물이 부서지고, 철길 도로 다리 제방 이런 것들이 끊기고 붕괴되는 그런 피해를 입고 있다고 그러합니다.

그런데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상태로는 평양 시내에 전력 공급이 대단히 어렵다라고 하는 외신들이 들어오는데, 장관께서도 그것을 파악하고 계시지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구체적으로 그 상황보다도 송전선, 전주 이런 것이 파괴되고 변압기가 파손되고, 변전소가 침수되어서 전력 공급이 전체적으로 원활하지 못한 상황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柳根燾 委員** 그렇습니다. 전력케이블이 물에 잠기고 끊겨서 중단되는 바람에, 전차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양 시내 교통 운송 수단이 정상적이지 않고, 그다음에 통신까지도 두절됐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겨우 어렵게 7년 만에 정상회담이 성사되어서 28일부터 30일까지 평양에서 열리게 되어 있는데, 코앞에 두고

저렇게 평양을 중심으로 한 북한 지역에 집중호우 때문에 사정이 대단히 어려워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 측이 이것을 이유로 해서, 집중호우를 이유로 해서 정상회담을 좀 늦추자라고 제의해 올 개연성 같은 것을 지금 얼마로 보고 계십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저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회담 준비접촉을 14일 바로 저희들이 이미 가졌고요. 그때 이미 북한의 상당한 수해 현황도 간접적으로 얘기를 듣고, 특히 평양이 40년 만에 폭우가 내려서 그것에 대한 피해가 대단히 크다는 것도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북측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회담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아주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柳根燾 委員** 이 정도로 정말 어렵게 성사된 정상회담이 잘 성사되기를 바랍니다마는 그런 예기치 않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북한 수해 복구 지원과 관련해서 어떤 방법으로 지원할 것인가를 연구 검토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셨지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예, 그렇습니다.

○**柳根燾 委員** 그래서 인도적 지원이 됐든, 긴급구호가 됐든 적절한 지원이 있어야 되겠다, 특히 정상회담을 앞두고. 그런 주문을 말씀드립니다.

○**통일부장관 이재정** 예, 고맙습니다.

○**柳根燾 委員**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이번 정상회담과 관련해 가지고 ‘욕심을 안 내는 그런 회담을 하겠다’ 그런 말씀을 자꾸 되풀이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무리한 욕심을 부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대통령 말씀이 계셨는데……

좋습니다. 임기 말에 개인이나 정권 차원에서 한 건 뭘 좀 해 보겠다, 올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욕심으로 이벤트성 회담을 하지 않겠다, 실질적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겠다 하는 의미라면 대단히 다행스럽고 환영할 만한 그런 워딩이지만 그러나 이 발언이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특히 국민들이 지금 아주 관심의 초점을 두고 있는 북핵 문제 같은 것을 일체 거론하지 않고 남북경제협력 방안 이런 부분에만 집중하겠다는 그런 속내를 드러내 보인다면 그것은 대단히 위험한 말씀이다 그런 얘기를 드

리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욕심을 부리지 않겠다’ 하는 그런 말씀에 붙여서 ‘욕심을 한번 내보는 회담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의제와 관련해서도 이 문제가 연계가 되는데, 장관의 보고에서도 의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 의견을 듣고 있다, 취합하고 있다고 말씀 하셨지요? 국회의원까지 들겠다, 그렇지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각 부처에 지금 공식적으로 TF가 역할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하나의 과제들을 저희들이 취합하고 있는 중입니다.

○**柳根燾 委員** 구체적인 의제를 회담 전에 시시콜콜 얘기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큰 흐름 몇 가지를 가지고 가서, 디테일은 협상장에서 순간순간 일어날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런데 제가 의견을 취합한다고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대통령이 어제 8·15 경축사뿐만 아니고 국무회의 발언을 통해서도 ‘의제와 관련해서는 나에게 이래라저래라 하지 마라’, 알아서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 들으셨지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아니, 그 의미가 이래라저래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柳根燾 委員** 이래라저래라 하지 말라는 말씀……

○**통일부장관 이재정** 아닙니다. 이런 회담에서 이런 의제는 되고 저런 의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어떤 의제든지 다 다룰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뜻이 대통령님의 뜻이었다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柳根燾 委員** 지금 남북정상회담을 국민의 70~80%가 찬성한다는 말씀을 여러 번 강조하셨는데, 그러면 북한 핵 문제를 의제로 삼아야 된다 하는 그런 여론조사는 한번 해 본 적 없습니까? 어떤 의제를 가지고 정상회담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여론조사 안 해 보셨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여론조사는 저희가 해 보지 않았습시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북핵 문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제는, 그 의제야말로 한반도 평화에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는 것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고요, 대통령께서도 이에 대한 중요성과 가치를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고, 이것을 적어도 정상 간에 어떤 방법으로 논의하든지 그것은 일단 정상께 맡겨놓는 것이 적절치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柳根燾 委員** 아무튼 국민 여론을 취합하신다고 그러니까, 제가 직접적인 여론조사는 안 해 봤습시다만 여러 사람의 말을 듣고, 의견을 들어 보면 북한의 핵 문제 이게 대단히 중요한 제1 의제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국민들 사이에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협력이라고 하는 의제도 중요하지만. 따라서 경제협력과 관련된 부분만 강조해 가지고는 안 되겠다.

지금 이 남북정상회담이 실질적으로는 참여정부가 이미 5년 전에 출발하면서 제의를 해 놓고 있던 것을 북한이 어느 날 갑자기 ‘오케이, 하자’ 그래서 성사되는 것 아닙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위원님께서도 이 점은 간과해서는 안 되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북핵 문제는 이미 수년에 걸쳐서 6자회담 틀에서 논의를 해 오고 있고, 이미 9·19 합의라는 북핵 문제 해결의 큰 틀에 합의가 되어 있고, 이것을 실천해 나가는 2·13 합의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 정상 간에 논의를 한다고 하면 진행되고 있는 6자회담의 틀과 2·13 합의 조치가 어떻게 정말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의 과제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柳根燾 委員** 그런 말씀을 하시면 얘기가 복잡해집니다, 사실. 얘기가 복잡해지는데, 정상이라고 하는 것이 실무자들이 풀지 못하는 문제를 정상이 정치적으로 만나서 해결할 수도 있는 것이고, 단계나 과정을 뛰어넘을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말씀만 고집하시면서 정상회담에서 핵 문제가 논의되는 부분을 기피해야 된다 하는 듯한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통일부장관 이재정**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현재 북핵 문제가 해결도 안 되고 있고 시행도 전혀 안 되고 있다 그러면 정상 간에 당연히 아주 심도 있게, 심각하게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느냐 하는 문제가 논의될 겁니다.

다만 지금 해결하는 방법과 시행이 6자의 틀 속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柳根燾 委員** 그러면 장관께서는 지금 정상회담 의제로 북핵 문제가 상정되는 것이 부적절하다 그런 말씀입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그렇지 않습니다. 6자의

틀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북핵 문제 해결이 원만히 진행되고 이것이 성공할 수 있도록 물론 논의를 하고, 정상 간에 의견 교환을 하게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柳根燾 委員** 시간이 다 되어서 마치면서……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이번 정상회담이,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한국이, 남한이 좀 욕심을 내서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정상회담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다 그런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통일부장관 이재정**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기선** 특히 수해 복구에 우리 정부가 적극 대응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요청도 전해 주셨는데, 류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주신당의 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 위원** 최성입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에 정상회담 준비접촉 대표단으로 참여할 때 보면 다섯 차례 회담을 했고, 한 달 넘게 논의를 거쳤고, 차량 1대, 언론인 1명 가는 것을 가지고 정말 낮을 붙히면서 대화를 했는데 이번에는 1차 준비접촉에서 대체적인 합의를 도출했는데 이것이 사전에 국정원장이 중요한 의제나 기타 등등에 대해서 합의를 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남북 간의 이견이 그만큼 해소됐기 때문입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이 문제는 두 가지의 배경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1차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미 경험해 놓은 정상회담의 하나의 틀이 있고요, 그리고 지난 7년간 여러 가지 형태의 대화와 회담을 통해서 남북 간에 일정한 정도의 합의된 내용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전에 무슨 합의 이런 것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번 준비회담에서는 양측의 책임 있는 사람들이 대표가 되어서 이 문제를 과거의 경험들을 바탕으로 무리 없이 합의해 냈다고 생각합니다.

○**최성 위원** 통일부차관을 단장으로 해서 선발대가 방북을 하게 되는데 그때 중요한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도 차관이 현장에서 실제 협의하고 논의하고 사전 조율하는 과정을 거칩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

다. 이번 선발대가 가는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것이 실무절차를 진행하는 그런 일들이지 다른 문제들을 다루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준비접촉에서 이루어진 내용들을 실질적으로 실천에 옮기도록 하기 위해서 선발대가 가게 됩니다.

○**최성 위원** 그러면 지난 1차 남북정상회담 때는 5차에 걸친 한 달 넘는 준비접촉 과정에서 북이 요구하는 전제조건 또 남이 희망하는 여러 가지 기대사항들이 지나칠 정도로 충분히 논의됐고, 또 이후에 선발대 방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조율과정이 있었는데, 걱정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대단히 중요한 순간에, 그리고 또 NLL 문제를 포함해서 예측할 수 없는 북한의 여러 가지 요구들을 감안했을 때 아무리 양 정상이 자유롭게 논의한다고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한반도 비핵화 또 남북 정상 간의 일정한 합의가 보혁 갈등이라든가 국제적인…… 또 여러 가지 이견이 노출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서 해소할 계획이십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1차 정상회담이 열린 시대라고 하면 남북 간에 충분한 교류협력의 단계가 아니고 냉전과 대결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처음 하는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다섯 차례의 준비도 필요했었고 그런 여러 가지 이해를 위한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미 벌써 여러 계층의 회담이 진행돼 왔었고요, 1차 회담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의제의 선정이라든가 혹은 회담의 진행방법이라든가 이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논의를 하고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위험성은 크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성 위원** 장관님, 저는 어쨌든 한반도 비핵화의 이행과 관련된 한반도 평화선언에 대한 검토, 또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 또 대통령께서 화두로 던진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대화, 저는 참으로 중대한 대화이고 아무리 1차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7년의 성과가 있었다고 하지만 사전에 비중 있는 의제에 대한 조율과 일정한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통일부차관께서 잘하시겠지만 선발대 구성에 있어서 대통령과 또 정부의 입장을 긴밀하게 협의할 수 있는 이 의제 관련한 핵심 인사들도 선발대에 파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

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남북 간의 교섭이라든가 정상회담 준비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최성 위원** 이번에 금수산기념궁전 등 참관지 방문 문제가 준비 접촉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논의되었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논의된 바가 전혀 없습니다.

○**최성 위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대화의 핵심적인 내용이 개성공단과 같은 이러한 제2의 개성공단 건설 이런 측면입니까, 아니면 정부가 현재 가장 비중을 두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아직 이 문제는 말씀드리기가 너무 성급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서두에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개발과 투자라는 관점에서, 특히 북한의 경제회생이라는 관점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다방면의 논의를 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최성 위원** 이번에 북측의 수재가 정부의 대북 지원 또 미국까지 앞장서서 유엔을 포함한 대북 수재지원 등이 오히려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한 분위기에 일조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은 없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글썽……

○**최성 위원** 이를테면 인도적인 지원 문제나 남북 농업교류의 필요성도 더욱더 절박하게 상호가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그동안 수해의 경우에 남북 간에 지원해 온 경우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수재지원을 한다고 해서 이것이 크게 정상회담에 좋은 영향을 준다거나 그렇게 생각지는 않습니다.

○**최성 위원** 언론에서 나온 추론이기도 하고 또 현실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노무현 대통령의 방북 시 개성에서 김정일 위원장이 직접 노무현 대통령을 맞이하고 개성공단 현장을 남북 정상이 같이 방문하는 그러한 행사는 의미도 있고 또 우리 정부가 북측과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장관의 견해 또 남북 간에 논의된 내용은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한 바가 없고요, 아시는 바와 같이 7년

만에 열리는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정상회담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춰서 현재는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최성 위원** 개성공단에서의 남북 정상의 현장 방문이 갖는 이런 의미에 대해서는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아마 대단히 큰 성과와 함께 중요한 영향을 미치겠습니다만 현재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남북 간에 전혀 논의한 바가 없습니다.

○**최성 위원** 충분히 가능성도 있고 그것이 갖는 의미는 상상할 수 없는 과장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노 대통령의 방문 시에 귀로든 아니면 초기 방북과정이란 성사시킬 수 있도록 준비 접촉, 정부 차원의 준비과정에서 꼼꼼한 대책을 강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께서 박길연 유엔 주재 북한 대사를 만났는데 이번 남북정상회담과 어떤 특별한 관계나 거기에 대한 유엔과 미국의 어떤 지원 협력, 같이 논의된 내용하고는 관계가 됩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그 내용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 위원** 장관님께서 얼마 전에 국회에 계셨고 누구보다 국회가 갖는 중요성을 과거 국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천영세 대표께서도 이야기를 하셨고 또 여러 위원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소속 정당이…… 저는 한나라당의 실제 의중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지한다고는 하지만 워낙 반대하는, 트집 잡는 내용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과연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인지, 대선 승리를 위해서 남북정상회담을 오히려 좀 어깃장 놓는 것이 나은지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솔직히 말해서 판단할 수가 없겠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민주신당, 민노당, 민주당 모든 정당이 남북정상회담에 전폭적인 지지를 하고 있는데, 어떻든 지난 정상회담에서도 정치권의 방북이 이루어졌는데 저는 이번에 초당적인 방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오히려 이후에 대단히 의미 있게 추진된 참여정부의 이 정상회담 노력이 정말 불필요한 논란으로 빠질 수 있다, 이 점에 대해서 좀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정상회담은 사실 역사적인

하나의 회답이고요, 역시 국민의 염원과 국가적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이 일을 준비하면서는 정말 역사가 주는 책임이 무엇인가, 또 우리 국민이 기대하고 국민이 염원하는 목표가 무엇인가를 아주 세심하게 따져서 이번 정상회담이 정말 그런 역사적 회답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성 위원** 워낙 예민하고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표현을 신중하게 하셨지만 저는 반드시 성사돼서 평화통일특위의 우리 위원장님, 또 누구보다도 정상회담에 대한 적극적 지지와 협력을 약속하고 있는 천영세 대표님, 이런 분들이 가셔서 다녀온 이후에 말로만 남북정상회담 지지 운운하면서 수백억 지원설, 수백조 지원설, 밀약설, 각종 근거 없는 설을 동원해서 비판하고 있는 그러한 정치세력이 있다면 오히려 정부가 그것을 나서서 해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분들이 가서 보고 실질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참여정부 이후의 정상회담에 대한 의미를 평가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시에 저는 한나라당 역시, 한나라당 출신의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고 하니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해서 의제로 설정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각종 현안이 있습니다. 어렵짐작 수백조에 달합니다. 그러나 저는 김문수 한나라당 지사가 정부에 정상회담 의제로 설정했던 수백조에 달하는 그러한 남북경협사업은 당장 퍼주자는 차원에서 그것을 제안한 것이 아니라 워낙 중요한 남북경협사업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정부가 이런 부분을 정말 비중 있고 책임 있게 의논해 달라는 것으로 해석하고자 합니다.

또 오늘 진영 간사님이 정부와 다른 당 동료 위원에게 왜 이견에 대해서 좀 균형있게 받아줄 수 없느냐는 이야기를 했는데 마찬가지로 한나라당은 원내 1당으로서 정부가 NLL 발언을 하든 중요한 현안이 있을 때 그 사안이 갖는 종합성과 어떤 균형성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 우려된다 하는 것하고, 완전히 토씨 하나를 가지고 친북 반미 좌파로 매도하려는 그런 시도가 진행이 되면서 원론적으로 정상회담 지지만을 외치는 것은…… 두고 보십시오. 한나라당 경선이 끝나고 나면 대선 후보들은, 당선된 후보는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정상회담의 성과가 있으면 지지를 할 것이고 뭔가 문제가 있으면 트집 잡는

이런 행태는 저는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또 어떻게 그런 것이 대선에 그토록 집착하는 정치세력에게 오히려 큰 부정적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거듭 장관님께 초당적인 방북단은, 정부로서는 국회와 정치권을 떨어뜨려 놓고 가면 좀더 편할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긴 안목에서 보면 훨씬 더 그것이 대통령과 참여정부의 순수성과 객관성과 역사성을 보여줄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점이라는 것을 좀 장관님께서 각별히 유념하시고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또 북측에서도 이러저러한 이유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데 그 부분들을 관찰시킬 것을 강력히 제안드리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기선** 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주 위원** 김형주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참고자료를 보니까 이번 2차 남북정상회담의 의의를 남북 간에 본격적인 평화번영 시대를 여는 출발점이고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진전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계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한편으로는 남북 정상 간의 회담입니다마는 북핵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6자회담 틀 속에서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남북 정상만이 해결할 수 있는 의제를 뛰어넘는 부분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내부적으로 이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통일부, 외교통상부, 국방부 이 모든 3개 부처가 상당히 많은 협력과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현재 진행상황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통일부장관 이재정** 정부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외교, 안보, 통일 이 관점에서 각 부처가 긴밀하게 모든 과제들을 협의하고 조정해 나가고 통합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려하실 바가 전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형주 위원** 그래서 그러한 역할분담들을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하나는 아주 뜬금없는 질문입니다마는 이번 2차 정상회담 속에서 남북관계, 또 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맞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는데 장관님께서 생각하시는 현상태보다 더 진전된

어떤 내부 통합과 통일의 새로운 국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태를 얘기합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통일의 새로운 국면이라고 하는, 합의서에 나와 있는 하나의 의제의 포괄적 의제설명이 있습니다만 이 내용은 여러 가지의 내용을 담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이에 대한 내용 검토는 저희가 기획단을 통해서 각 부처가 이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북측이 어떤 과제를 이 의제 아래 가지고 나올는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또 다른 측면에서, 여러 계층에서 연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분명하게 위원님께 설명드리지 못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주 위원** 예를 들면 지난번에도 어쨌든 6·15 정상회담을 통해서 남북 간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라든지 남북연합 이런 논의를 기왕에 해왔기 때문에 그런 데에 대한 어떤 정치적, 실질적 의제로 선정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그것은 이미 제1차 정상회담 때 논의를 해서 일단 그 단계는 넘어섰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소위 통일 이후에 통일체제라든가 통일의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미 논의의 과정에서 일찍 넘어간 것이 아니냐, 특히 낮은 단계의 연방제와 연합제가 갖고 있는 공통점에 대해서 양 정상 간에 합의를 했고요. 이것이 공동합의문으로 나왔기 때문에……

○**김형주 위원** 그런데 사실은 그런 부분은 이제 어떤 상징적 공통성을 찾아나갔다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제……

○**김형주 위원** 지난 7년 동안의 평가를 했을 때 실질적인 어떤 정치·경제적 통합의 프로세스가 얼마나 그러한 상징의 내용을 채웠느냐 하는 데 대한 이번 정상회담의 진의는 뭐랄까요. 사명감, 어떤 내용적인 의미, 이런 것이 기대가 될 텐데 그런 수준을, 뭐가를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사실 현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정상회담의 정례화라는 점에서 이번 회담이 열림으로 해서 일단 정상회담의 맥이 이어져 나오고 정례화의 길로 접어든다면 일정한 정도 1차 정상회담 때 나누었던 낮은 단계의 연방제나 연합제의 정신도 일부분 달성해 갈 수 있는 과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것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각급 남북

회담이나 남북회담의 제도화, 정례화가 바로 그런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형주 위원** 대통령께서 김대중 대통령님과도 만나서 여러 가지 지난 회담의 경험도 전수를 받았다고 하셨는데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사실은 남북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솔직히 미국과의 협력, 어떤 공유 이런 부분을 내심 걱정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남북정상 간의 회담,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회담입니다마는 큰 틀에서 국제관계의 틀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논의를 하고 계시는지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한반도 문제는 남북 간에만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는 절대로 아니고요, 여기에는 충분히 주변 국가 특히 한미관계의 아주 중요한 역할이 있고 한일관계, 한중관계, 한·러시아관계의 중요한 역할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국제관계의 틀 속에서, 특히 6자의 틀 속에서 한반도 문제를 의견을 조율하고 또 그것을 성사시키기 위한 노력도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남북이 해 나갈 수 있는 일이 예를 들자면 6자회담이 열리지 못했을 때 6자회담이 열릴 수 있도록 어떤 모멘텀을 만들어 갔다든가, 지금도 6자회담의 합의의 어떤 틀에 남북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했다든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남북의 책임 있는 역할들을 이번에도 역시 논의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형주 위원** 아까 금수산기념궁전 방문에 대해서 어떤 즉답을 안 하셨는데요, 예를 들면 지난번 1차 회담 때도 그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사실 그때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잘 설득을 하셔서 슬기롭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난번에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국립묘지 방문을 한 경험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도 또한 실질적으로 논의거리나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번에 갔을 때 우리 대통령께 북쪽에서 금수산 궁전 방문을 매우 강하게 요구했을 경우에 그런데 대한 시나리오를 갖고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참관지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계속해서 남북 간에 어려운 과제로 내려왔습니다. 1차 정상회담 때에도 물론 그런 과제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

의 경우에 양 정상은 남북관계의 질적인 발전, 한 단계 높은 단계로 발전시킨다는 관점에서 사실 이런 참관지 문제보다는 보다 더 본질적인 과제들을 직접 다루어 나가게 되지 않을까. 자칫 남북관계를 손상시킬 수 있는 일들을, 자칫 남북관계의 그동안 발전되어 온 여러 가지 과정들을 손상시킬 수 있는 일들을……

○**김형주 위원** 저도 그렇게 할 거라고 기대됩니다.

경협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핵심적인 문제 중의 하나가 전력공급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컨대 나진·선봉 지구를 우리가 예를 들면 TSR, TKR 이렇게 연결하는 데 있어서도 나진항을 열었을 때 하산 구간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항구 내부에서 가지고 있는 전력의 문제, 이런 것이 이외의 걸림돌이거든요, 항구를 열지만 그것이 현대화되어 있지 않음으로 해서 생기는. 그런 보다 본질적인 북한 전력공급 문제에 대해서 남북 간에, 또 러북 간에 여러 가지 논의를 이번에 좀 하고 오셔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이 문제는 사실상 6자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2·13 합의조치의 이행과정에 가장 중요한 것이 역시 에너지 문제와 연결되어 있어서 이 문제야말로 상당히 조심스럽게 6자와의 조율하에 논의되어야 될 과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형주 위원** 앞으로 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야말로 6자회담의 성공이 더욱더 완결성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기선** 좋은 질의를 해 주신 김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꽤 많이 되었습니다마는 아직도 이 분야의 최고의 권위자들이시고 또 관심이 많으신 오영식 간사님과 이낙연 위원님이 계신데 두 분 질의도 마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영식 위원님 먼저 해 주시지요.

○**오영식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를 가급적이면 빨리 끝내라는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지금 준비기획단 단장을 맡아 가지고 2차 남북정상회담을 실무 총괄 준비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또 국회 특위에 나오셔서 답변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신데 몇 가지만 제가

의견을 여쭙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2차 남북정상회담은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1차 때의 한반도 정세하고 다를뿐더러 7년여 동안 비록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남북 간에 쌓아왔던 일정한 성과의 토대 위에서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일회성 이벤트 내지는 어떠한 언론용 그림 이런 차원하고는 완전히 달라야 되고 또 국민적인 관심과 기대도 그러한 수준을 뛰어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잘 인지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보면 이번 2차 남북정상회담의 주요의제와 관련해서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좀더 실질적인 관련 논의, 또 지난 6·15 남북공동선언을 우리가 볼 때 이 단계에서 보면 한반도 평화 문제를 이후에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를, 물론 그 당시 정세에서 구체적으로 담아내기도 어려웠을뿐더러 지금에 와서 보면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은 이제 비어 있는 부분으로 비쳐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남북 간에 이 한반도 평화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다뤄 나갈 것인가에 대한 이러한 포괄적이든 기본방향이나 원칙이든 하는 문제들이 좀 내용 있게 다뤄질 필요성이 있다, 그게 구체적으로 한반도 평화 선언에 대한 합의로 연결될 수 있다면 더더욱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논의 내용의 하나는 분명히 현재 진행 중인 6자의 틀 속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러한 남북정상회담이 의미 있게 연결이 되고 뭔가 도움이 되는 그러한 방향의 어떠한 두 정상 간의 논의 결과들이 같이 또 제시가 되어야만 이러한 2차 정상회담에 대한 국민적 공감과 지지가 담보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인식의 전제에서 제가 먼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남북경제공동체와 관련된 논의가 지금 단계에서 이루어진다면 기존에 이렇게 각급 단위별로 내지는 분야별로 진행되던 논의들이 이제는 단순히 그 원조 성격을 뛰어넘어서 서로 상생의 협력관계로 남북 경협이 발전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새로운 질적 한 단계의 진전이 있어야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남북 경협에 어떤 군사보장에 관한 포괄적인 합의나 개발협력에 관한 어떤 의정서 체결 등이 이번에 정상회담의 결과로서 좀 논의되고 나와야 될 필요

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준비하는 주무부처 장관님으로서 어느 정도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위원님의 지적이 아주 옳으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기획단으로서도 지금 그러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어떤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준비하고 있고요, 아마 이것이 정상 간에 잘 합의가 된다면 좋은 결실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오영식 위원** 그리고 아까 류근찬 위원도 얘기를 하시던데 이것을 예를 들면 핵심의제로 설정은 안 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한반도 비핵화와 그리고 현재 북한 핵 해결의 과정 속에서 남북정상회담에서 이에 대한 어떠한 형태로든지 간에 합의된 메시지가 정리되어서 나올 필요성은 있다고 보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지금 이 단계에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나요, 준비와 관련해서?

○**통일부장관 이재정** 예,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드립니다만 절대 북핵 문제나 혹은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는 의견이, 입장이 전혀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다루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어떤 방법으로 다루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어쨌든 북핵 문제가 현재 6자의 틀 속에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 6자의 합의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이것이 6자의 틀 속에서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양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의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것을 논의를 하게 되는 것이 양 정상은 이것을 떠맡아서 이제 남북 간에 북핵 문제를 해결해 보자, 이렇게 대들 문제는 결코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오영식 위원** 그렇지요, 그 지점이 중요한데 그러니까 이 부분이,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정상회담을 바라보고 있는 정치권의 시각 중에서는 왜 이 부분들을 먼저 크게 타이틀로 걸어야지만 되는 것 마냥,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가 정상회담에서 의미 있고 실효성 있게 논의가 안 되는 것처럼 지금 주장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의제 설정이나 또 논의 내용과 관련되어서 이러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두 정상 간에 그러한 기초하에서 실질적인 논의를 한다는 부분들을 어떠한 형태로

든 간에 좀 잘 설명을 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예, 분명한 것은 제일 첫째 과제가 한반도 평화의 과제이기 때문에 이 과제에서 이 문제가 아주 충분하게 그리고 아주 효율적으로 다루어져서 좋은 결론을 내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2·13 합의조치가 원만하게 진행이 되고 신속하게 이행이 되어서 한반도의 비핵화까지 이를 수 있도록 정부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오영식 위원** 그리고 이번 2차 정상회담에서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나 남북자·국군포로 송환 등 사실 남북 간에 대개 좀 민감하고 어려운 주제들 그러나 인도주의적으로 매우 절박한 문제들이 현재까지 다양한 수준에서 풀어져 왔는데 이번 2차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 부분과 관련되어 가지고 크게 더 진전된 결과들을 좀 가져올 수 있는 전망은 어떻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기본적으로 금강산에 이산가족의 상시 상봉을 위한 시설도 지금 건축하고 있고요, 이것이 대개 완공을 하게 되면 적어도 내년부터는 상시 상봉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넘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북측도 이에 대해서 결코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저희들이 논의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과제들 가운데, 가령 이제까지 장관급회담에서도 논의되어 온 기타의 국군포로의 문제라든가 남북자의 문제까지도 포함해서 인도주의적 문제라고 하는 것은 우선적 과제로서 우리들이 지속적으로 다루어 나가면서 해소해야 될 과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영식 위원** 좋습니다. 이번 2차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 등을 좀 도모할 수 있는 전기를 좀 만들어 보자 이러한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남북관계나 한반도 평화 진전을 위해서는 정부 당국자 간의 협의나 한 단계 더 진전된 이러한 논의의 틀을 만드는 것과 함께 국회 차원에서의 남북의 협력과 논의 이러한 부분들이 제기된 지는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아까 방북단의 이러한 정치권의 참여문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2차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남북 간에 국회 차원에서 논의와 협력의 틀이 제도화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계기가 좀 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특별히 좀 염두에 두고 있는 준비내용이 있으시면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이것은 지난번 통외통위원회에서도 김원기 위원께서 제안을 해 주셨고요. 국회 차원의 대화라고 하는 것이 남북 간에 아주 필요하고 그리고 아주 효과적인 길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국회에서 제의한 이 의제를 잘 논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영식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저는 특히 위원장님께, 오늘 특위 전체회의를 토대로 해서 위원장님이 좀 나가 가지고 이번 제2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서 국민들과 더불어서 초당적으로 정치권이 지지하고 협력한다는 취지의 국회 특위 차원의 입장을 성명서로 채택하는 방안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장 배기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민주신당의 이낙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낙연 위원** 시장하실 테니까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여러 차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북한 핵 문제는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지요. 하나는 '남북 간의 문제이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국제 문제이다'라는 것입니다. 90년대 초반 북핵 1차 위기를 거치면서 그 와중에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채택해서 이것이 남북 간의 문제라는 인식을 확인했습니다마는 동시에 북핵 1차 위기를 거치고 또 제네바 합의를 이끌어 내면서 그것이 국제화되어갑니다.

어제 대통령께서 낭독하신 광복절 경축사를 보면 바로 이런 문제에 대한 대단히 조심스러운 접근이 읽혀집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등은 남북의 국민에 대한 그리고 세계를 향한 약속이다, 새로운 선언보다 이미 한 합의를 지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6자회담 당사국들이 9·19공동성명과 2·13합의를 이행해 나갈 것으로 확신한다, 남북 대화와 6자회담이 선순환관계가 되도록 운영해 가야 한다'라는 등등으로 북핵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간접적인 방식으로 언급하고 계십니다.

문습니다.

첫째는 현 국면에서 북핵 문제 해결의 주된 단위는 6자회담이고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그 보완 기능을 수행한다라고 위치 설정을 하고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문제가,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남북이 이미 합의했기 때문에 이 합의를 지켜 나간다는 것은 남북의 아주 중요한 하나의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6자회담의 틀 속에서도 역시 이것을 진행해 나가는 동력은 역시 남북 간의 합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북핵 문제를 완결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6자회담의 원만한 진행과 성공을 지원하도록 한다' 이런 표현을 한 것이지요.

○**이낙연 위원**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느냐고 여쭙 것이 아니라 관계를 묻는 것입니다. 주된 단위는 6자회담입니까, 그렇습니까? 북핵 문제 논의의 주된 단위는 여전히 6자회담입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지금 북핵 문제에 대한 해결 논의의 단위는 6자회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낙연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이번 남북대화, 정상회담이 그 정점에 있습니다마는 정상회담을 비롯한 남북대화는 6자회담의 성공을 도와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6자회담의 틀 속에서 남북이 책임지고 가야 될 그 분야에 대한 논의가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낙연 위원** 그렇다면 6자회담의 틀, 즉 9·19나 2·13보다 앞서 나가는 어떤 문제 제기나 제안이나 합의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뜻인가요,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는 뜻인가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현 단계에서는 9·19 합의 내용을 어떻게 성실하게, 신속하게 지켜 내느냐 하는 이행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점에 대한 논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낙연 위원** 9·19나 2·13을 앞서 나가지는 않을 것이지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꼭 그렇게 뭐……

○**이낙연 위원** 앞서 나갈 수도 있다? 어느 쪽이 신가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글썄, 그것에 대해서 단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야말로 정상 간에 협의와 합의될 일이지 제가 기획단장 입장에서 유추하거나 혹은 전제할 일은 아닌데요, 다만 이제까지 저희들의 기본 입장은 6자회담과 남북대화가 서로 선순환적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이것이 앞서 가고 뒤따라 가고 하는 문제가 아니고 그 일을 통해서 이루어 내야 될 목표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노력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낙연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형주 위원께서도 거론을 하셨는데요, 이것이 최고의 자주외교이면서 동시에 미국을 비롯한 관련국들과의 공조는 결코 경시할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든 여쭙는 것입니다. 이것이 앞서나갈 수도 있는 것이냐, 그렇지않도록 일정한 선을 두고 있는 것이냐?

○통일부장관 이재정 저는 궁극적으로 비핵화를 이루어 내는 목표달성이 가장 중요하고요, 상황에 따라서 6자회담의 틀 속에서도 남북이 주도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낙연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대중적 차원에서 보면 이번 회담도 주고받기로 나중에 해석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약간은 걱정스럽게 보는 것이 있습니다. 남쪽이 북쪽에 줄 만한 것은 상당히 가시적인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마는 반대로 남쪽이 받을 만한 것은 가시적이지 않을 수가 있다, 상당히 선언적인 것일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정상회담 이후에 여론의 공세에 시달릴 가능성도 있다라는 걱정을 제가 노파심처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남이 받을 것 중에 가시적인 것이 꽤 있다,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기본적으로 이번 정상회담에서 경협 문제를 논의할 때 개발과 투자라는 관점에서 공동의 이익을 추진한다는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가령 우리가 북에 SOC 투자를 한다고 하면 그 자체가 단순히 북에 주는 것이 아니라 미래적으로 통일시대 혹은 이 북핵 문제 이후의 한반도 통일시대, 평화시대에 올 하나의 그런 투자의 개념으로 본다라고 하면 그것을 꼭 '주고 우리는 받는 게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낙연 위원 한반도 경제공동체 구상을 깊게 해석하면 장관님 말씀처럼 그렇게 됩니다마는 아직은 대중의 수준이 거기까지는 가 있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우리의 숙제입니다마는 그것 말고, 대중적 차원에서는 '경협' 그러면 아무래도 '주었구나'라고 해석하기가 더 쉬울 것입니다. 그러면 대중적 차원에서 볼 적에 '아, 이것은 확실히 받았구나'라는 가시적인 것이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실제로 저희가 이제까지 진행해 온 경협사업 가운데 예를 들면……

○이낙연 위원 지금 경협 이외의 것을 묻고 있다는 것 짐작하시지요? 준비되고 있는가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낙연 위원 바로 그 주고받기 협상에서 우리 국민들이 흔히 갖기 쉬운 어떤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입니다.

○통일부장관 이재정 예, 충분히 염두에 두겠습니다.

○이낙연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배기선 이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관련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부의 보고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논의되었습니다. 오늘 여야 위원님들께서 2차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서 많은 귀한 말씀과 제언을 해 주셨는데 특히 북한 개발은행을 설립해서 대북지원하자, 또 초당적 차원의 대표단을 구성했으면 좋겠다, 당국 간 핫라인을, 또 NLL에 관한, 해운 관계 발전에 관한 여러 가지 의견들, 또 남북평화의료지원단 구축, 국회 차원의 협력을 위한 국회회담 개최 촉구, 국회 차원의 2차 정상회담을 초당적으로 지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자, 또 6·15 국가기념일을 지정했으면 좋겠다, 이번 북한의 수해에 대한 정부의 복구지원을 촉구하는 문제, 또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산하에 상설기구를 설치했으면 하는 등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하신 여러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또 이번 정상

회답이 성공하는 데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지금 회답 준비하셔야 되는데 국회가 너무 오랫동안 붙잡아서 방해가 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좋은 말씀들, 이 말씀들은 모두 국민의 바람이고 또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얻어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통일부장관님을 비롯한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마지막까지 지켜봐 주신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생방송을 열심히 해 주신 우리 국회방송 관계자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8분 산회)

○출석 위원(15인)

김 영 숙	김 형 주	배 기 선	류 근 찬
심 재 엽	오 영 식	우 윤 근	이 낙 연
이 상 경	장 복 심	정 청 래	지 병 문
진 영	천 영 세	최 성	

○위원 아닌 출석 의원(1인)

임 중 인

○출석 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구 회 권
전 문 위 원	허 태 수

○정부측 참석자

통일부

장	관	이	재	정
차	관	이	관	세
혁신재정기획본부장		조	용	남